

교과용도서 정책 현안 검토 및 제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xtbook Policy Issues

연구책임자: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연구자: 진재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조원: 방인자(충남대학교)

2010.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협의 검토진

김만곤(한국교과서연구재단)
김창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송인발(교육과학기술부)
유대균(교육과학기술부)
임이균(한국교과서연구재단)
조성준(금성교과서)
한원경(대구교육청)

김재춘(영남대학교)
나주환(한국검정교과서)
오형은(천재교육)
이화성(경북고등학교)
정병초(한국검정교과서)
최창렬(교육과학기술부)
홍후조(고려대학교)

(가, 나, 다 순)

이 연구는 2010년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 개발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머리말


본 연구는 교과용도서 정책의 현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는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과서 관련) 마련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습니다. 곧 교과용도서의 수정, 감수, 선정(채택) 등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관련되는 법률과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연구 기간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자료 조사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로 선행연구 검토와 교과부의 제도 개선 자료를 참조하고, 교과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의 방향을 가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서 정책 관련 법제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지원하여 많은 교과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처럼 법제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습니다. 본 연구를 출발로 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교과서 정책과 행정 행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연구 결과를 기다려 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의 관계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 본 연구를 마무리 해준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전 찬 구



연구요약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과서 자율화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 개선에 따른 교과용 도서 현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들을 교육적, 현실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등의 제도화 방안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현재 교과서와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교과서 수정, 감수, 선정 등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안을 제시한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교과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교과서 수정, 감수 및 채택 관련 외국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교과서 채택제도와 교과서 수정 및 검정 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에 교과서의 자율적인 활용을 추구하면서도 질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오류가 많은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벌금

을 부과하는 제도는 인상적이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과 채택제도 그리고 교과서 수정·보완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매우 체계적이고 안정된 교과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다른 기관들에서 교과서나 교수학습 자료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교과서 수정 및 감수 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먼저, 교과서 수정 관련 내용에서는 현행 교과서 수정 체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수정 체제는 기본적으로 교과용도서 지위부여에 따른 상이한 수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정의 시기를 적기에 맞추기 위해 <교과서 상시 수정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의 교과서 수정 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교과서 저작자/발행사가 교과서 수정에 적극적이지 않고, 저작자에 대한 교과서 수정 명령 이행을 담보할 법적 조건이 미비하며, 교과서 자율화가 추진되었지만 교과서 수정에 대한 교과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과서 수정이 교과서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행의 교과서 수정 체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교과서 수정 정책의 기본 입장을 재정립, 2)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여 교과서 수정에 대한 이행력 제고, 3) 교과서 수정이 지속적인 교과서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정기 검정제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교과서 감수 제도에 관해 논의하였다. 교과서 감수란 교과서의 편찬, 검정, 인정의 과정에서 내용의 오류, 어문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전문기관에서 교과서를 검토·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현재 인정도서가 확대되면서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감수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교과서 감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감수 기간이 충분한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서 감수를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1) 교과서 감수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2) 교과서 감수가 실질적이고 책무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가야 하며, 3) 교과서 감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장에서는 교과서 선정(채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에서 작성 보급한 <검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토대로 교과서 선정의 의미, 절차, 제공되는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과서 선정을 위해 각급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곧 교과서 선정을 위한 연수, 교과서 선정 평가자료 제시, 권장목록 작성, 교과서 전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수준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의 학교별 교과서 선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채택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소규모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선정 단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교들이 1-2명의 교사가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개입하여 교과서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과서 선정 과정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 유형을 살펴보았고,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의 처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선정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적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V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교과서 현안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교과서 관련 법규 개정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교과부에서 이미 공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과용도서 관련)을 살펴보았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교과서 관련 현안들에 대한 행정 처리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를 두고자 마련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교과용도서 검정, 인정 신청 및 수수료 부과

근거 규정 신설,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규정 신설, 교과용도서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검정합격 및 인정의 취소 규정 신설,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이다. 곧 기존에는 주로 하위 규정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었던 것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제시하려는 것과 일부 규정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필요한 조치이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사용 조항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어서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기조와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검토를 요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하위 법규라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거로 제시된 조항들에 의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과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재조정 혹은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추진 계획안(2010. 12)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감수 규정의 신설, 교과용도서심의회 조직 및 기능 조정에 관한 규정, 검정심의회 위원 명단 공개, 교과서 수정의 범위 및 절차 마련, 교과용도서의 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 및 검정합격 또는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향후에 좀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법률안의 각 조항과 규정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과 우리 교과서 정책에서의 효과 등에 대해 좀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향후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과서 자율화 확대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에서의 제도화 연구와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검토라든가 교과서 정기검정제 도입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를 위한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



차례

I .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6
3. 연구의 방법	7
4. 선행연구 분석	10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20
6. 연구추진 일정	20
 II . 교과서 수정, 감수 및 선정 관련	 21
1. 미국	23
2. 일본	27
3. 영국	34
4. 독일	35
5. 프랑스	35
6. 외국사례의 시사점	36

III. 교과서 수정 및 감수 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 탐색 ..	39
1. 교과서 수정	41
2. 교과서 감수	54
IV. 교과서 선정 관련 사항 검토 및 개선 방안	61
1. 교과서 선정의 의미와 절차	63
2. 교과서 선정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	67
3. 교과서 선정 단위 검토	79
4. 교과서 선정 과정의 감독	85
V. 교과서 현안 문제 해소와 관련된 법규 개정 방안 ...	93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과용도서 관련)	95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99
VI. 요약 및 제언	109
1. 요약	111
2. 제언	116
참고문헌	119
[부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121



표 차례

<표 Ⅲ-1> 교과용도서 지위 부여에 따른 수정 체제	42
<표 Ⅲ-2> 34 개 인정도서 감수 기관 목록	55
<표 Ⅳ-1> 2009년 중학교 - 학급수별 학교 수	80
<표 Ⅳ-2> 중학교 학급 규모에 따른 과목별 교사 수	81
<표 Ⅳ-3> 2009년 고등학교 - 학급 수별 학교 수	82
<표 Ⅳ-4> 일반계 고등학교 과목별 교사 수	83



그림 차례

[그림 II-1] 일본의 의무교육 제학교용 교과서 채택의 구조	31
[그림 III-1] 국정 및 검정교과서 상시 수정, 보완 시스템	44
[그림 III-2] 인정교과서 상시 수정, 보완 시스템	4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선행연구 분석
5. 연구결과에의 기대효과 및 활용
6. 연구추진 일정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미래 선진형 교육에 알맞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을 해오고 있다. 교과서 편찬 제도의 자율화, 교과서 공급 및 가격제도의 개선 그리고 교과서 선정·채택 제도의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우리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미래사회를 선도해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어야 하고, 학교 교육 환경도 이와 같은 변화 방향에 부응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을 지속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담아내야 할 교과서도 미래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래형 교과서란 무엇보다도 ‘질 높은 교과서’를 뜻한다. 질 높은 교과서란 첫째,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로서 학습자 친화적 내용 구성과 서술 방식을 제시하는 교과서이다. 곧 별도의 해설서나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이해가능하게 서술된 교과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학습 용어의 사용과 설명 제시, 사진, 삽화, 통계자료 등 학습에 필요한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는 교과서가 그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교과서이다. 교육과정의 취지를 구현하고 국가 교육의 방향에 부합하는 교과서, 교육과정의 의도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는 교과서, 국가 교육의 방향이나 정책이 실제 교육의 현장에 연결되는 교과서가 그것이다. 셋째, 학습 효율을 제고하는 교과서이다. 곧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구성되어 학습 효율을 높이는 교과서, 내용 구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학습 수준과 형태도 다양하게 제시하는 교과서, 학생 중심적인 학습 자료의 역할과 교사를 지원하는 효율적 교수 자료의 역할이 적절하게

안배된 교과서, 한 권의 책으로 끝나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용지도서, 워크북, 멀티미디어 자료, 실험·실습 자료 등 다양한 보완 교재들을 구비하여 수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키트(kit)화된 교과서가 그것이다. 넷째,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이다. 학습 의욕과 동기를 높이고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 배려하는 교과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해석하여 재창조할 수 있는 내용 구조를 가진 교과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교과서, 학습자의 수준 차이를 반영한 선택적 학습 혹은 차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과서가 그것이다.

이러한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해내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자율화, 달리 말하여, 교과서 편찬 과정에 국가의 관여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게 하고,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과서가 편찬,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과서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 교과서 편찬 제도의 자율화를 크게 확대하였다. 곧 국정과 검정 교과서의 수를 축소하고, 인정 도서를 크게 확대하여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서들이 편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는 학교교육 전반의 자율화와 일관된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바로 자율화가 교과서의 질 저하나 이념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과서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민주화, 자율화가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전(經典)으로서의 교과서관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자유롭게 편찬되어야 하지만, 교과서의 오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독특한 교과서관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다양화로 인해 나타나는 이념적 갈등이 교과서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반드시

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와 함께 이러한 문제 대응할 수 있는 교과서 제도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히, 교과서라는 구체적인 매체의 개발과 활용은 정책 주체인 교과부와 함께 다양한 저작자들 그리고 교과서 발행을 담당하는 상업적인 출판사들이 관계하는 복잡한 행정 행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율에 따른 교과서 관련 주체들의 책무성을 묻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현재 교과서 정책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교과서 현안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정비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첫째,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를 추진하되 교과서가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통계수치 등 교과서에 수록된 사실적 자료의 업데이트와 내용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체제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과서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이 교과서의 질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안함과 동시에 교과서 출판사들의 자율적인 수정·보완과 질 관리 체제를 실효성 있게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를 추진하되,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와 같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교과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 선결조건으로서 교과서 내용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과목에 따른 차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어, 도덕, 사회 등 우리나라의 이념적 근간을 다루고 있는 교과/과목의 교과서들은 편찬 자율화에서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과서 내용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수정·보완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 교과서 제도 개선에 따른 교과용 도서 현안 문제들이 제

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적, 현실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등의 제도화 방안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현재 교과서와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교과서 수정, 감수, 선정 등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

가. 교과서법 수정 체제의 현안 검토 및 개선 방안

- 선진해외 사례 분석, 관련연구 분석, 관련 법률분석
- 국·검·인정 교과서의 상시 수정·보완의 절차와 방법 및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
- 교과서 상시수정체제의 법령에 대한 이론적 근거
- 교과서 상시수정체제의 운영 방안 탐색

나. 교과서 감수 제도의 현안 검토 및 개선 방안

- 교과서 감수의 개념과 관련 선진사례 및 연구결과 분석
- 교과서 감수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검토
- 교과서 감수의 법률적 사례 분석과 법령(안) 마련

다. 교과서 선정 비리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탐색

- 교과서 선정 비리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 제도 검토
- 교과서 선정 비리 및 불공정 행위 처분 실태 분석
- 교과서 선정 비리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적 처분의 적정성 검토

라.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개선 방안

- 이상의 현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 개선안 제시 등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 선진해외 사례 수집 분석
-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관련 법률 등 문헌 분석

나. 관계 전문가 서면 인터뷰 및 협의회 실시

- 교과서 정책 현안 관계자 서면 인터뷰 실시: 교과서 현안과 관련하여 교과서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인터뷰 대상자:

번호	성명	소속
1	김창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나주환	한국검정교과서
3	정병초	한국검정교과서
4	김재춘	영남대학교
5	홍후조	고려대학교
6	이화성	경북고등학교
7	조성준	금성출판사
8	오형은	천재교육
9	김만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0	한원경	대구교육청
11	최창열, 유대균, 송인발	교과부 교과서 담당관(교과서기획과)

2) 인터뷰 질문:

교과서 정책 현안 검토를 위한 질문

1. 교과서 수정 체제

- 1-1.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서 수정 체제의 적절성, 현실성 문제
-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의 위상과 성격에 알맞은 수정 체제는 무엇인가?
 - 민간이 저작한 검정 교과서 수정에 대한 적절한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 1-2. 교과서 상시 수정 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 실효성 있는 교과서 수정을 위한 발행사와 저작자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 <인격저작권 동일성 유지>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 관련하여 발행사와 저작자의 표준약관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 1-3. 교과서 수정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적절성
-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과 내용은?

2. 교과서 감수 제도

- 2-1. 교과서 감수(監修, supervision)의 개념

- 교과서 검정 심사 및 교과서 심의와의 차별성은?
- 교과서 ‘감수’만으로 교과서의 적절성을 판정할 수 있는가?
- 2-2. 교과서 감수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검토
 - 새롭게 도입된 인정도서 감수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은?
- 2-3. 교과서 감수에 대한 제도적 기반(법령 정비) 마련
 -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교과서 감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교과서 감수 관련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3. 교과서 선정 제도

3-1. 중앙 정부의 역할

- 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중앙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가고 있으나 반면 교육에서 중앙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교과서 검정 관련 자료(검정위원들이 작성한 ‘수정보완 권고서’와 발행사에서 작성한 ‘수정의견 반영 대비표’)를 공개함으로써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비록 심사본과 최종본의 내용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선정에 참고자료로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의 역할과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2. 시도 교육청의 역할

-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 중 상당수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 관련된 권한은 커지고 있다.
-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은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서 대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시도교육청의 권한은 전무한 상황이다.
- 교과서 대금 납부자의 입장에서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3-3. 일선 학교의 역할

- 교과서 선정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 중·소규모 학교의 경우 각 교과별 선정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과목별로 1~2명에 불과하거나 전무한 경우도 많다.
-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3-4. 교과서 선정 비리 방지 대책

- 교과서 선정은 발행사의 이익과 직결된다. 따라서 교과서 선정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4.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개선 방안

4-1. 초·중등교육법상의 개선 방향

4-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향과 내용

- 전문가 협의회 실시(2010. 9. 27)
 - 연구진을 포함한 인터뷰에 응한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 자문

다. 교과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T/F팀의 지원 및 정보 공유

- 교과부의 자체 T/F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상호 협조하고 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 제고

4.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과서 정책 현안- 교과서 수정, 감수, 선정(채택)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욱(2010). “인정 도서로 전환된 전문 교과 도서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서연구>, 제60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문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교육을 하려면 동일한 교육과정 안에서도 교과서 개발 또는 수정 보완의 주기가 짧아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도서개발에 대한 정부

의 관여가 적은 인정도서 제도가 전문계고 교육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도 국·검정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를 인정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인정도서 확대 방안 추진을 통하여 교과서 개발 기간 축소 및 개발·채택·수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정도서 확대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전문계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 교과(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해양에 관한 교과, 가사 실업에 관한 교과)의 경우 산업 현장 및 기술 발전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수시로 교과서를 개발 또는 수정·보완하게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교과 도서의 발행 제도가 국정에서 인정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른 장점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안 시행으로 인한 교과서의 질과 교육 경쟁력 저하, 그리고 교육 환경 격차의 심화가 예상된다.

현행의 도서 발행 시스템에서는 인정도서가 국정과 검정보다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질이 높아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첫째, 국정에서 인정도서로의 전환에 따른 도서 개발 및 인증 주체의 변화로 이를 위한 도서 개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인정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거나, 인정 심사를 검정에 준하여 받거나, 심의가 필요 없는 인정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한 상태이다. 둘째, 국정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됨에 따라 도서 개발비용이 감소되거나 투자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이에 따른 교과서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전문 교과의 경우 시·도 교육청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개발하여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정 도서로 발행해 왔다. 따라서 이 과목들을 인정도서로 발행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에 앞서 일부 전문 교과의 경우 교과서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거나 축소된 비용과 집필 기간으로 질 낮은 교과서가 개발되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정도서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아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인정도서를 개발한 시·도교육청 및 민간 출판사들이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받기 위하여 개발된 인정도서 3년치를 한꺼번에 인쇄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교과서의 오류 및 변화에 따른 개정과 수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국정과 검정의 경우, 국가와 출판사가 매년마다 교과서의 오류 또는 지식 기술 변화에 따라 교과서를 개정하는 것과는 달리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질 관리가 쉽지 않았다.

문흥근(2010). “인정도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 <교과서 연구>, 제60호.

인정도서 심사 요건의 강화: 인정도서의 경우 그 범위가 넓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질 높은 인정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인정도서 확대에 따른 각 시·도 교육청에서의 도서 심사 업무가 폭주하고, 심의 업무를 전담할 기구나 인력도 부족하여 현재의 인정도서 심의 체제의 보완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인정도서 업무 처리 규칙과 지침의 표준화를 통해 인정도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여 심의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에서도 인정도서로 전환된 도서를 중심으로 감수 기관을 선정하여 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되는 도서 및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전문 교과와 자체 개발하는 인정도서나 인정 승인을 요청한 도서의 감수·심의 위원 추천을 지원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도 인정 도서 감수 기관 지정 및 심의 전문 인력풀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인정 도서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인정 도서의 발행과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정 승인된 인정도서를 NEIS에 신속히 등재하여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도서를 주문·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인정도서의 감수·심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정도서의 심의 절차와 심의 지침 및 규칙을 표준화하고, 학습 및 교수법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시·도 연구 정보원에 인정도서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정도서의 향상적 질 관리 체제 운영: 인정도서 발행사들은 한번 공급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미흡한 편이며, 교과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통로도 미비한 편이다. 따로 제도화된 대책도 없어 교과서 오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낭비적 쟁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교과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용 교재의 책무성 확립을 위해 교과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과서 모니터제’나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인정 승인을 하는 ‘정기 인정 심의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교과서를 개선하는 데는 교원, 학생, 연구·집필진, 편집진, 학부모 등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과서를 개선하는 지름길은 이를 사용해 본 교원과 학생들로 하여금 단위·주제·차시별로 일정 인원을 지정해 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교원 및 학생 교과서 모니터체제’를 구축하여 가르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발행사나 연구·개발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정 도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만곤(2006). 「검정도서 수정·보안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외국의 교과서 검정제도의 시사점: 교과서 오류 수정·보완은 사후 수정보다는 사전에 철저히 바로잡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교과서 검정 이후에도 오류의 수정·보완을 위해 일정한 인력이나 기구를 투입하고 있지만(함수곤, 2003)¹⁾,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오류가 발생하면 출판사에 벌금을 부과하여 오류를 발견한 시민이나 학생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검정 이후에 제

1) 함수곤(2003). 일본의 교과용도서 편찬체제 및 개발모형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대로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검정 이전에 출판사 스스로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교과서 수정·보완 체제 개선 방안: 교과서의 오류 수정·보완 체제 개선 방안은, 교과서의 연구·개발, 편찬과 발행, 재판 발행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국정도서 편찬기관의 연구·집필·심의진,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 출판사 편집진, 검정도서 연구·집필·검토진, 검정 심의위원 및 출판사 편집진 등)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교과서 제도와 체제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유학영 등(2005)은 2001년 상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건수를 분석하고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건수와 수정·보완 내용을 보아 교과용도서에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며,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의 폐쇄성에서 오는 것으로 제도 자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음에 개편되는 교과용도서에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였다.²⁾

최근에 이루어진 수정·보완 관련 연구: 교과서의 오류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업무 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또 그나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오프라인 체제 구축 방안 연구와 모니터링제 도입 방안 연구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병길 등(2003)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 체제 도입을 앞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방안 연구에서 3단계의 온·오프라인 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손병길 등은 이 연구에서 교과용도서 수시 보완 온 오프라인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에 법적 근거와 세부시행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교과서 질 개선이 가능한 수준의 출판사 재정 기반 확보가 선행 조건이라고 하였다.

2) 유학영 외(2005).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5-4.

이어, 유학영 등(2005)은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무를 돕기 위한 연구로서, 교과용도서의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 관리 체제는 오프라인상의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모니터링 관념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상에서 운용될 수 있는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종합 관리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온라인 시스템인 'CUTIS'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의 교과서 편찬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프랑스나 영국은 교과서의 인정이나 채택이 매우 자유로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처럼 검정을 주로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검정기준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검정을 주로 하는 일본이나 미국(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은 교과서 검정을 위한 공통기준이나 세부기준, 혹은 오류 예방과 오류의 수정·보완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조치에 관한 규정이 매우 정교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교과서 검정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수정·보완에 관해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과서의 오류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만, 교과서 편찬 제도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교과서의 오류가 우리나라처럼 교과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현상 자체를 불식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비교하고, 현행 교과서 오류 수정·보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과서의 오류 예방 및 효율적인 수정·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검정 과정과 교과서 관리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줄이고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일선교사의 내용 검토 수준을 높이는 방안, 교과목별 교과서 검토 협의체 구성·운영, 관계 기

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시스템(CUTIS)에 대한 홍보 및 운영의 활성화, 오류 사항의 데이터베이스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의 우수 교과서 선발, 저작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과서 편찬 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과서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오류 수정·보완 등 검정 업무 위탁의 확대, 국정도서 편찬 업무의 위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책무성 강화, 정기 검정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편수 조직은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중요성이나 업무량에 비해 매우 허약할 뿐만 아니라, 국정도서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편찬하고 있고, 국·검정을 포함하여 교과서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형태로 검정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유독 교과서 오류의 수정·보완 업무만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오류 수정·보완 업무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내용 수정·보완 업무의 진행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검토 의견 및 여론 수렴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는 독자적으로 교과목별 내용 검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시스템(CUTIS)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에서 직영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의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 사회관련 교과서 수정·보완 추진 (2006. 9. 15)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에 의한 내용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은 수시-부분 개정으로 전환되어 이 시책이 실현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정책 업무의 양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편수 조직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어

국정교과서의 편찬이나 잡다한 오류의 수정·보완 업무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일이므로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와 특수학교 교과서 편찬 업무 전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위탁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편수 조직은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 등 본연의 정책 업무에 몰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직을 정비하게 하고, 검정 심의위원 추천권 부여, 검정위원·연구위원·간사로서의 참여 보장, 검정교과서 일체의 수정·보완 권한 부여 등의 조치로써 이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부정기 검정의 폐단과 정기 검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일본은 물론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기 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기 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의 편수 정책은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편수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출판사들도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구(2006).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에 부쳐”. <교과서연구>, 48호.

교육인적자원부 표기 체계 제정 경위: 2006년 5월 18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어원이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는데, 협정의 골자는 교과서와 ‘표준국어대사전’ 간에 표기법을 단일화하고,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를 도입, 추진하는 한편, 교육용 어휘 공동 조사 등 국어능력 향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또 감수를 받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국립국어원이 국어 어문 정책과 연구를 맡고 있는 최고 기관이니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아무 근거 없이 표기를 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나름대로 표기 통일을 위해 애를 써 왔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 1999년에 출판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露呈)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분석해서 급한대로 교과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표기 준칙을 만들었다. 즉, 지금까지 교과서 편찬에 적용해 오던 띄어쓰기와 사이스 표기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문 규정의 해석에 통일을 기하며, 이를 교과서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한글 맞춤법 적용 준칙’을 우선 만들게 되었다.

박도순(2001).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미국의 교과서 심사(textbook review) 기준과 심의 진행: 교과서 심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사스 주가 정한 필수 교수학습 내용 및 기능(TEKS)이다. 무엇보다 (1) 주 교육위원회가 선정한 교과서용 도서는 필수 교육내용의 내용요소를 만족시켜야 하고, (2) 사전에 설정한 교과서 제조 기준과 사양에 충족시켜야 한다. (3) 실제적 사실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최근에는 심사본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출판인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Publishers Association)는 ACCURACYE-line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과서 오류 수정을 위한 통로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고 있다. 교과서 오류는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경우 출판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예컨대, 1992년 한 해 텍사스 주에서는 3,700군데 이상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적기에 수정하지 않은 출판사에게 86만불의 벌금을 부과했다(Viadero, 1992).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50쪽 짜리 수학 교과서에서 50쪽에서 오류가 백 여건 이상 발견되었다(Manzo, 1999). 따라서 이와 같은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50만 달러를 들여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검토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Prentice Hall과 같은 출판사는 아예 웹에 교과서를 올려

놓고 관련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오류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를 일시적으로 심사함으로써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질 높은 교사용, 학생용 교재를 공급한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미국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요약: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검정 제도는 아니지만, 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하는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검정과 다른데, 교육 당국에서 교과서를 제도적으로 질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교과서를 심사하여 채택하는 대표적인 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이다. 여기서는 텍사스 주의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 혹은 주의 교육과정과 국가 혹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과서 심사 채택 기준이다. 심사 기준은 텍사스 주에서 정한 교과목별 혹은 학년별 필수 지식 및 기능(TEKS)이다. 즉, 교육과정 기준이 곧 심사 기준이 되고 있다. 심사는 교육과정 기준에 나타난 것을 교과서가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다면 교육과정 기준 일치본 교과서로 분류하고, 절반 이하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하면 교육과정 비일치본 교과서로 분류된다. 또한 교과서 외형 체제나 오류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아 교육감이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사본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서를 일시적으로 심사함으로써가 아니라 항상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질 높은 교사용 학생용 교재를 공급한다는 취지를 두고 있다. 물론 출판사들로 하여금 오류를 수정, 보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심사 위원들에게 소명하고 답변할 기회 및 이의 제기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주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과서 목록 내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목록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에 대한 주 교육부의 교과서 보조금은 가격의 70%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교과용도서 정책 현안인 교과서 수정, 감수 및 선정(채택)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초점은 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교과서 현안을 체계적, 제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제화에 있으므로 이 선행연구들에서 시사점을 얻되, 이 연구들에서 제안된 개선 방안들이 초·중등교육법이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교과서 자율화에 따른 정책 현안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질 높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편찬, 공급,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교과서 정책 현안 관련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시

6. 연구추진 일정

연구기간 : 2010. 7. 20. ~ 2010. 12.						
연구내용 \ 월	7	8	9	10	11	12
○ 연구 계획서 작성	√					
○ 연구 주요 내용 협의 (연구진, MEST 관계관)		√				
○ 교과서 현안 관련 문헌분석		√	√	√		
○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		
○ 교과부 T/F와 협의					√	
○ 보고서 작성						√
○ 보고서 검토 및 인쇄						√

II. 교과서 수정, 감수 및 채택 관련 외국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외국사례의 시사점

1. 미국

가. 교과서 채택 제도³⁾

미국의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른 지방 분권식이며, 이러한 원칙 아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는 인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정제는 각 교과용도서 발행자(민간 출판사)들이 이미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해 국가 기관이 교과용도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에서는 주 단위로 교과서를 채택하는 주 인정제 방식(state-wide Textbook Adoption)과 지역학교구(school district) 및 개별학교에서 교과서를 평가하고 채택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주 정부의 교과서 평가 및 채택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주 차원에서의 평가를 거쳐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주에서 결정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각 지역학교구 또는 학교들이 자체 평가나 현장 연구를 거쳐서 자신들이 사용할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주 채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주 교육국이 최종적으로 채택하기까지 총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채택을 위한 평가를 받기 위해 주에 제출된 교과서들은 주 교육국에 의해 임명된 수업자료자문패널(IMAP: Instructional Materials Advisory Panel)과 내용검토패널(CRP: Content Review Panel)이 평가한다. 평가에 앞서 패널 구성원들은 약 1주일 정도의 연수를 통해 채택 과정, 평가 준거, 주 기준 등을 숙지하고 평가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연수 이후 IMAP와 CRP 구성원들은 교과서를 할당받고 2개월에 걸쳐 교과서를 평가한 후, 각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패널별 전

3) 김현숙(2009). 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와 그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35. pp.68-81.

제 심의 과정을 거쳐 채택할 교과서를 추천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교과서를 최종 채택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고 일반 대중의 평가와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출판사들이 제출한 교과서들을 주 전역에 걸쳐 최소 30일 동안 전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 교육국 차원의 공청회를 통하여 대체로 과목별로 4~10개 정도의 교과서를 채택한다. 지역학교구들은 이들 교과서 목록을 토대로 지역학교구 자체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개의 교과서를 지정하고, 개별 학교는 자신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를 선정한다.

이와 달리 주 정부 차원의 교과서 승인 절차 없이 각 지역학교구 또는 개별 학교에서 교과서를 평가 채택하는 지역인정제(Local Adoption)를 실시하는 주에서는 주 정부가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고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만 각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자유 발행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학교구에서 교과서채택위원회를 구성하여 주 정부의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해당 교육청 내의 학생들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스스로 선정한다. 이 경우 그 수준과 방식이 매우 다양해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각 학교와 교사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다.

나. 교과서 수정 및 검정⁴⁾

미국은 주마다 검정기준 및 검정 절차가 다르지만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가 교과서 검정기준이나 절차를 특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주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텍사스 주의 검정 관련 규정 중에서 총론 부분을 보면, 출판사는 주 교육국과의 모든 회의에 대한 날짜와 시간, 장소, 회의 목적을 명시한 예정표를 자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채택된 교과서는 제작의 표준과 세목 (MSST)이라

4) 김만곤 외(2006). 검정도서 수정·보완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미국의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검정과는 다르다. 주로 교과서 선정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므로 그 연구보고서의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는 기준을 따라야 하고, 출판사는 그들이 제작한 교과서가 이 기준의 최저 수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또, 계약 기간 중에 교과서에 제작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 없이 다른 교과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국장이 법령 위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여 교육법과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실적인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벌금, 학습이나 교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실적인 오류가 있으면 3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고 수정한 교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벌금에 대한 주 교육국의 자유재량권을 인정하여 위반의 정도와 이력, 오류를 고치기 위한 노력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벌금을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적인 오류의 종류는 학습에 지장을 주는 오류, 교수에 지장을 주는 오류, 가벼운 오류로 구분된다.

텍사스 주의 교과서 검정 심사원단은 모든 교과서에 대하여 필수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 교육장에게 승인과 비승인의 목록을 추천해야 하며, 이 때 사실적인 오류 사항은 물론 주 교육법에 위배되는 내용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검정 심사원단은 출판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어떠한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규정에 제시되어 있으며, 어떤 교과서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국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검정 심사 과정에서는 물론 채택 단계에까지 철저히 보고된다. 견본이 제시될 때에는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가 함께 제작되어 제시되어야 하며, 지역교육서비스센터에 4부씩 제출된다. 또한 출판사는 사실적인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교과서의 교정 목록과 함께 그 견본을 교육국장에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국장은 제출된 모든 교과서에 대해서 검토 심사원단에 의해 작성된 평가서, 제작의 표준과 세목(MSST)과의 일치성, 지적된 사실적 오류의 수정, 교과서의 가격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이때 특히 최종 추천서와 함께 오류 수정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6월, 캘리포니아 주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문서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역사-사회과학 기준의 교육자료 설계와 역사-사회과학의 구상에 대한 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의 역사-사회과학 기준의 교육자료 설계와 방안에 대한 검정기준은 대부분 자료의 구성에 관한 유의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오류에 대한 유의점이 특징적으로 부각된 부분을 보면,

‘교육자료는 알맞은 문법과 철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자료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역사는 계속성과 담화적 일치성(기승전결), 그리고 최상의 학문적 사실에 기초하여 잘 구성된 이야기로 제시되어야 한다. 주요 자료들, 서신, 일기, 문서, 사진은 정확하고 생생한 시대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엄격하고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 외의 모든 면에도 동일한 구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로써 미국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개관하면 교과서 심의기준은 기본적으로 필수 교수-학습 내용 및 기능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주 교육위원회가 선정한 교과서는 필수 내용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 ② 사전에 설정한 교과서 제작 기준과 사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③ 사실적 오류가 없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특히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 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출판인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는 "ACCURACY E-line"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과서 오류 수정 통로를 개방하고 있으며, 오류가 발생하면 학습에 방해가 되는 오류나 교수에 방해가 되는 오류 등 중요한 오류는 물론 '가벼운 오류'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 경우 연간 3,700군데 이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적기에 수정하지 않은 출판사에 8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50쪽짜리 수학 교과서의 50쪽에서 100여 건 이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또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매우 정교하고 합리적인 검정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미국은 교과서의 오류 수정에 대한 문제를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해결하고 있다. 즉, 오류가 발생하면 출판사에 벌금을 부과하여 오류를 발견한 시민이나 학생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검정 이후에 제대로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검정 이전에 출판사 스스로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김만곤 외, 2006).

2. 일본

가. 교과서 검정과 채택 제도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은 대체로 4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① 검정 신청 → ② 문부과학성 교과용도서 조사관 조사 → ③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문부과학대신의 자문 기관) 자문 요청 → ④ 심의회의 심의·의결 → ⑤ 문부과학성에 보고 → ⑥ 검정 의견 통지(합격 여부 결정)

은 유보) → ⑦ 수정표 제출 → ⑧ 심의회의 자문 요청 → ⑨ 심의회의 심의·의결 → ⑩ 문부과학성에 대한 답신 → ⑪ 합격 여부 결정 → ⑫ 검정 결과 통지 → ⑬ 완성된 견본 제출 → ⑭ 검정 결과 공개(신청 도서, 합격 견본, 검정 의견서, 수정표 등)

현재의 이러한 검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1989년 4월에 교과용도서 검정 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확립된 것으로, 이때 간소화, 중점화, 검정 결과의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을 계기로 검정 의견의 문서화, 오기·오식 심사의 폐지, 공개 장소의 확충 등과 같은 검정 절차와 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1991년부터 검정 신청 도서와 검정 후의 도서 등 검정 관계 자료의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1994년에는 공개 장소를 도쿄 한 곳에서 전국의 6개소로 확충하였고, 1998년부터는 8개소로 확대하였다. 1997년부터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도쿄의 공개회장을 상설화하여 자료를 연중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2001년부터는 종래 신청 교과용도서와 합격 견본을 공개하고 검정 의견을 공표하는 것에서 그치던 것을 검정 의견서와 수정표도 같이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검정 제도는 정보 공개, 검정 절차 간소화 등의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개선되었지만, 교과용도서 출판사가 문부과학성의 검정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과서 채택 권한은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설치하는 시(市), 정(町), 촌(村)이나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의 교육위원회에 있다. 국립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결정권한이 교장에게 있다(박도순, 2001).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의 교과용도서 채택 절차는 다음과 같다(유학영, 2009, 재인용).

① 서목(書目) 제출(검정한 교과용도서의 서목을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
 → ② 교과용도서 목록 송부(문부과학대신이 각 학교와 시정촌 교육 위원회에 송부) → ③ 견본 송부(교과용도서 발행자가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와 채택권자인 시정촌 교육 위원회, 국·사립학교장에게 송부) → ④ 교과용도서 선정 심의회의 자문과 답신(도도부현 교육 위원회는 교장과 교원, 교육 위원회 관계자, 학칙 경험자로 구성된 교과용도서 선정 심의회 설치, 심의회는 교과별로 수 명의 교원을 조사원으로 위촉, 교과용도서 조사·연구) → ⑤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의 지도 조언(교과용도서 선정 심의회의 조사·연구 결과 토대) → ⑥ 교과용도서 전시회 개최 → ⑦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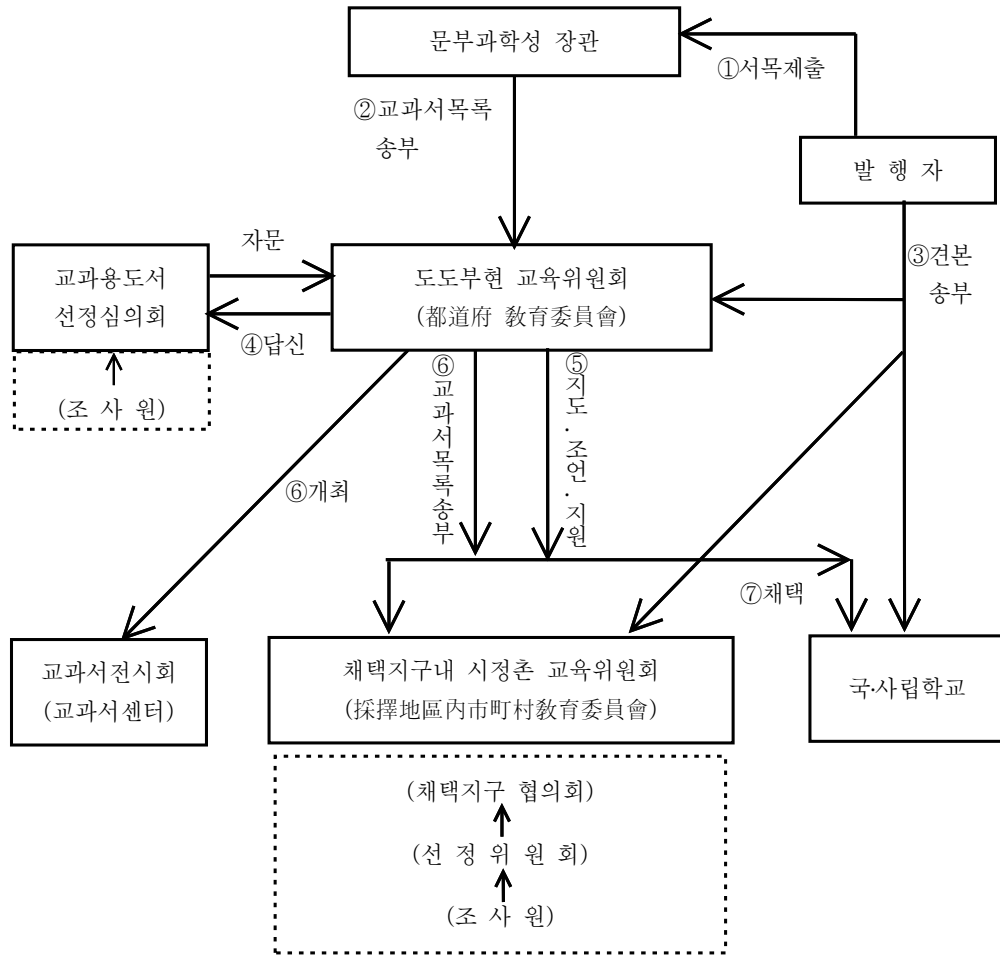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중등교육학교의 전기 과정 및 특별지원학교의 초등·중등학부의 교과서는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 방법이 정해져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법률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공립 고등학교는 소관 교육위원회가 채택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이인제 외, 2007).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서 채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이인제 외, 2007).

- (1) 발행자는 검정을 거친 교과서를 가지고 차년도에 발행하고자 하는 과목·사용학년·도서명·저작자 명부(서목)를 문부성장관에 신고한다(①). 문부성장관은 신고 내용에 있는 서목을 일람표로 정리하여 교과서 목록을 작성한다. 이 교과서 목록은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 및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송부된다(②). 교과서는 이 목록에 등록되지 않으면 채택될 수 없다.
- (2) 발행자는 채택 과정에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년도에 발행할 교과서의 견본을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 또는 채택권자(시정촌 교육위원회 혹은 국립·사립학교의 교장)에게 송부한다(③).
- (3) 채택의 권한은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시정촌 교육위원회 혹은 국립·사립학교의 교장에 있지만, 적절한 채택을 확보하기 위해 도도부현

의 교육위원회는 채택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를 조사·연구하여 채택권자에게 지도·조언·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를 함에 있어,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장급 및 교원, 교육위원회 관계자,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심의회는 전문적이고 방대한 심의를 해야 함으로, 각각의 과목마다 통상 수 명의 전문 지식이 있는 교원이 조사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이 심의회의 조사·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선정자료를 작성하여 채택권자에 송부하는 것으로 조언을 하게 된다(④·⑤). 또한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교장 및 교원·채택 관련자의 조사·연구를 위해 매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일정 기간 교과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전시회는 각해 매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일정 기간 교과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전시회는 각 도도부현이 학교의 교원과 주민의 교과서 연구를 위해 설치한 교과서의 상설 전시장(교과서 센터) 등에서 열리게 된다. 교과서 센터는 1956년에 설치된 곳으로 2006년 11월 현재 전국에 841개소가 있다(⑥). 이와 함께, 국민들의 교과서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공립 도서관 또는 학교 도서관에서 교과서 정비가 추진중에 있다.

- (4) 채택권자는 도도부현의 선정 자료를 참고로 하는 한편, 독자적인 조사·연구를 더하여 한 과목에 한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⑦). 의무교육 제학교용 교과서는 통상 4년간 동일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다.



[그림 II-1] 일본의 의무교육 제학교용 교과서 채택의 구조

* 출처: 이인제 외(2007). 일본의 교과서 검정·채택 정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 교과서의 수정·보완

다음은 정확성 및 표기·표현에 관한 교과서 기준으로, 주로 문장의 형식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통 수정·보완을 논의할 때는 이러한 형식면의 오류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 측면과 분리하여 제시한 것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만곤 외, 2006).

[정확성 및 표기·표현]

- ① 도서 내용에 실수 및 부정확한 곳, 상호 모순되는 곳이 없을 것
- ② 도서 내용에 학생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및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없을 것
- ③ 한자와 가나 표기, 한자 읽기, 가나의 로마자 표기, 용어, 기호, 계량 단위 등의 표기가 적절하여 통일되지 않는 곳이 없고, 별표에 제시된 표기 기준을 따르고 있을 것
- ④ 그림, 표, 그래프, 지도 등은 각 교과에 따라 통상적인 약속, 방법에 따라 기재되어 있을 것

일본의 교과용도서 검정 절차를 보면(김만곤 외, 2006),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와 일본은 교과서 검정에서도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일본 간에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일본은 검정도서 심의회의 심의 결과 수정이 필요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격 여부의 결정을 유보하여 검정 의견을 통지하고, 검정결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합격 여부의 결정을 유보받은 신청자는 수정한 내용을 수정표로 작성하여 다시 제출한다. 문부과학대신은 수정을 완료한 신청 도서에 대하여 재차 심의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심의회의 답신에 의거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오류 등의 수정·보완에 철저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내용 정정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이다.

교과서 발행자도 검정을 완료한 도서에 대해서 명백한 오류로 인정되는 사실 기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받아 정정 신청을 권고하게 된다. 일본의 교과서 조사관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일본에서는 검정교과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발행사가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정 종료 도서의 정정]

- ① 검정을 거친 도서에 대해서 오기, 잘못된 출력, 탈자 혹은 잘못된 사실의 기재 또는 객관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발행자는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 ② 검정을 거친 도서에 대해서, 전항에 규정하는 잘못된 기재 이외에, 학습을 전개하는 데 지장이 주는 기재, 경신을 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실의 기재 혹은 통계 자료의 기재 또는 변경을 행하는 것이 적절한 체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발행자는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정정을 행할 수 있다.
- ③ ① 항에 규정하는 기재의 정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기, 잘못된 출력 혹은 탈자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동일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의 것일 때,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기재의 정정이 동일성을 가진 자료에 따라 통계자료 기재의 경신을 행하는 것 혹은 체제의 변경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동일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의 것일 때는, 발행자는 ② 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재차 문부과학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정정을 행할 수 있다.
- ④ 문부과학대신은 검정을 거친 도서에 대해 ① 항 및 ② 항에 규정하는 기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자에 대해 그 정정의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검정 종료 도서의 정정 절차]

- ① 전조 ① 항 또는 ② 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첨 양식 제5호에 따른 정정 신청서에 정정본 1부를 첨부하여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전조 ③ 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양식 제6호에 따른 정정 신고서를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전조 ① 항 혹은 ② 항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동조 다 항의 정정을 행한 자는, 그 도서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어 있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정정의 내용을, 현재 그 도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영국

영국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발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출판사도 없고, 교육출판업자 협의회나 학교위원회 또는 각 지방교육행정 당국의 교재센터, 교재서비스국과 같은 공영기관이 교과서 제작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교과서 출판회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과목별 교수요목에 따라 만들어진 학습 자료를 출판한다(김진경, 2004). 교과서의 채택은 지방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학교 교장이 교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비교적 큰 힘을 가지고 있으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각 교과 담당교사, 특히 교과주임의 의견이 존중된다(김만곤 외, 2006, 재인용).

하지만 학교 및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평가(Key state1부터 시행)가 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준다. KS1~4단계에서는 학습 자료를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KS5 단계에서는 국가 기관인 QCDA가 승인한 시험 주관 기관이 직접 개발한 교과서와 시험 주관 기관의 협력 출판사가 개발한 자료를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KS5단계에서는 디플로마(Diploma) 등 국가시험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업의 교과서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다. 그 외에 KS1~4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포함한 교재의 선택과 사용에 관해 주임 교사(head teacher)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 교육청, 학교가 공식 지정하는 교과서가 없다(이인제 외, 2010).

4. 독일

교육부의 심의절차를 통과하여 승인된 새로운 교과서들은 그 해 목록에서 제외된 교과서들과 함께 매년 재 출판되는 교재 목록에 추가되어 공시된다. 이러한 교재 목록을 토대로 각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한다. 승인 받은 교과서들 중에서 해당 과목의 수업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먼저 그 학교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해당 과목 전담교사 회의의 임무이고, 전담교사회 의는 선택한 교재 목록을 교사 전체회의에 전달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대표는 교재의 채택 과정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수립된 목록에서 전체회의는 학교에 배정된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수량을 결정한다. 각 학교는 교사 전체회의를 통해 다양한 과목별, 계열 구분별로 배정된 교재 예산의 분배를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같은 학교의 같은 학년은 같은 교과서를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김진경, 2004).

5. 프랑스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 심의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과서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교사가 전문적 판단에 따라 교과별 학습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과 교육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교사들은 국립교육자료센터(CNDP)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므로 교과서는 유일한 교수·학습 자료가 아니며, 한 학교의 같은 학년이라도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를 수 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예체능 교과서는 별도로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체육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고 있어 CNDP에서 제공하는 자

료로 수업을 전개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학교교육에서는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재와 교구의 개발에 대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김만곤 외, 2006).

또한 교과서제도가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서 국가의 관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각 학구의 교과서 선정 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것을 대학구 총장 또는 교육 부장관이 승인한다. 학교에서 이 리스트 중에서 교사가 선정하고 교장이 최종 확정한다. 중등학교는 각 출판사가 매년 5월경에 교과서 소개 책자를 각 학교 자료정보센터로 보낸다. 각 학교는 교과별로 회의를 통해 교과서를 선정한다(김진경, 2004).

교과서 선정 과정에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나 학교장의 간섭 및 개입이 배제되며, 교사의 교과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연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수를 통해서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방향과 선정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출판사의 사회적 책임,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사회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내용의 심각한 오류 및 편향성 발견시 출판사는 사회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출판사의 책임 하에 체계적인 교과서의 수정·보완 시스템 구축·운영이 되는데 교과서의 배포 이후 발견이 되는 오류는 별도의 보충서 또는 수정 안내문 등을 제공한다(이인제 외, 2010).

6. 외국사례의 시사점

지금까지 교과서 수정, 감수 및 채택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채택 방법이나 감수체제 등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보다는 각 국가에서의 교과서 수정, 감수 및 채택 방법 중에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에 시사점을 줄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교과서 채택 및 수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른 지방 분권식으로, 채택방식은 주 단위로 교과서를 채택하는 주 인정제 방식(state-wide Textbook Adoption)과 지역 학교구(school district) 및 개별학교에서 교과서를 평가하고 채택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택방식 중에 주 인정제 방식(state-wide Textbook Adoption)에서는 채택을 위한 평가를 받기 위해 앞서 평가 패널 구성원들이 연수를 통해 평가 방법에 대해 공유를 하고, 최종 채택 전에는 공청회를 열고 일반 대중의 평가와 의견을 참고한다. 또한 오류의 수정에 있어서, 오류의 종류를 구분하며, 오류를 수정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교과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며 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채택에 있어서 채택 과정과 평가 준거 등을 숙지한다는 점에서 채택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오류의 수정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오류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과 벌금, 보상체제를 통하여 출판사에게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는 점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검정 제도에서 정보 공개,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전의 제도보다 개선하였다. 공립학교의 교과용 도서 채택은 교과별 수 명의 교원을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교과용 도서를 조사·연구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과용도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채택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교과서의 수정·보완에 있어서는 규정을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검정교과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발행사가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 역시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정 결과 공개와 검정 의견서와 수정표를 같이 공개하도록 하는 점,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오류를 분리하여 제시하는 방식은 질 높은 교과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교과서 제도 자체가 많이 다르지만, 주목할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비교적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중등학교의 경우 각 교과에 담당교사, 교과주임의 의견이 존중되어 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협의하여 결정이 된다. 독일의 경우는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교재의 채택 과정에 참석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교과별 학습내용을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과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재와 교구의 개발에 대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또한 교과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연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국가별로 그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 채택을 위해서 교과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며, 오류의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교과서의 질 향상과 다양한 교재 개발을 위해 출판사와 국가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을 취한다는 점과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에서 교과서 선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과서 수정, 감수 및 채택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II. 교과서 수정 및 감수 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 탐색

1. 교과서 수정
2. 교과서 감수

1. 교과서 수정

교과서 수정이란 이미 국정, 검정, 인정 등의 편찬과정을 거쳐 발행되어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나 표현을 고치거나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서도 인간이 만든 자료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러한 수정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교과서를 완전한 자료로 인식하는 ‘경전으로서의 교과서관’이 온존하고 있고, 때로 사회적 상황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교과서 개편 주기가 이를 따라잡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통계자료 등의 오차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때에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더 나아가서 교과서가 담고 있는 교육 내용이나 관점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념적 논쟁의 주된 대상으로 등장할 때에 교과서 수정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곤 한다. 이 점에서 교과서 정책의 주무를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수정의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 된다. 교과서 수정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현재 우리의 교과서 수정 체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현재 우리의 교과서 수정 체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현안들을 검토해 본다. 그리고 향후 교과서 수정 체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가. 현행 교과서 수정 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서 수정은 교과서의 종별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교과용도서 지위 부여에 따른 수정 체제

구분	교과용도서 지위 부여			교과용도서 수정			
	편찬(개발)	지위 신청	지위 승인	형식	오류 검토	수정 요청	승인
국정	국가 (편찬 위탁기관)	-	국가	직접 수정	국가 (편찬 위탁기관)	국가 (편찬 위탁기관)	국가
검정	민간 (저작자· 발행사)	민간 (저작자· 발행사)	국가 (검정 위탁기관)	수정 명령	민간 (저작자· 발행사)	민간 (저작자· 발행사)	국가
인정	민간 (저작자· 발행사)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학교장	국가 (인정위탁 기관 시·도 교육감)	수정 요청	민간 (저작자· 발행사)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민간 (저작자· 발행사)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국가 (시·도 교육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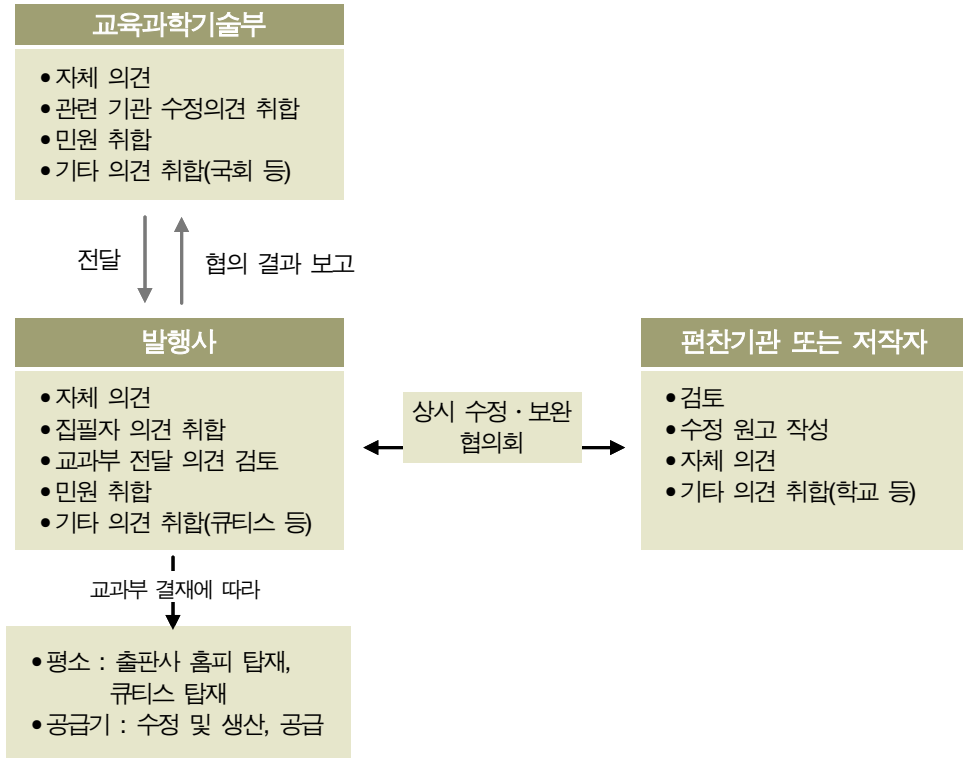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교과용도서 수정 체제는 국가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정도서에 대해서는 '직접 수정'을, 민간이 개발하여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 부여를 신청하고, 국가의 검정 심사 과정을 거쳐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검정도서(저작권은 민간 소유)'에 대해서는 '수정 명령'을, 민간 등이 개발 완료한 도서에 대해 학교장이 사용 승인을 신청한 인정도서에 대해서는 발행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저작하고 편찬한 주체가 교과서의 수정을 담당하게 하는 틀로서 현행 체제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편찬, 발행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수정 체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국 규모의 선택 교과까지 인정도서로 확대된 현실에서는 인정도서에 대한 인정 신청권자의 자격을 저작자 및 발행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인정도서 역시 '수정 명령'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정 명령을 집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과부 장관이 아닌 시·도 교육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감이 수정의 주체가 된다고 해도, 수정 명령으로 전환되면 검정과 인정의 차이점이 불분명하고 단지 심사의 강약(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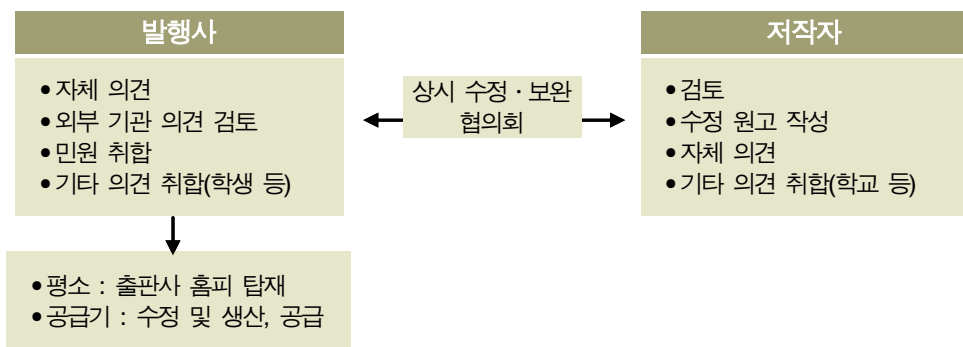
빡한 심사, 느슨한 심사) 차이로 검정과 인정을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다음 절의 감수와 관련하여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검정도서는 민간이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교과용도서의 지위 부여를 신청한 민간(저작자·발행사)에게 국가가 일정한 검정 심사 과정을 거쳐 교과용도서를 지위를 부여한 도서를 말한다. 따라서 지위 부여 신청 과정에서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명예 따르겠다는 합의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작자들이 검정 도서를 집필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국가가 정한 관련 절차와 지침 등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사항도 이미 따른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검정 교과서의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교과서 수정 체제는 그 동안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해오면서 변모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교과서의 수정 사항을 적기에 수정하기 위해서 <교과서 상시 수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교과서 상시 수정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1] 국정 및 검정교과서 상시 수정, 보완 시스템



[그림 III-2] 인정교과서 상시 수정, 보완 시스템

이러한 상시 수정 체제에서 수정되는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이나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른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 2) 사회변화, 산업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계 수치 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 3) 표현, 표기, 오타자 등 교과서 저작 및 편찬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적인 오류
- 4) 우리 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 내용 해석의 차이나 관점의 변화에 따른 수정

이상과 같은 다양한 배경에 따라 교과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2)번 항목과 3)번 항목에 해당되는 수정 사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정들은 교과서의 질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교과서 수정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4)번과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이미 국정 또는 검정 절차를 거쳐 발행된 교과서를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저작자와의 마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교과서 수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 교과서 수정 관련 문제점

이러한 현재의 교과서 수정 체제는 효과적이며 원활하게 교과서 수정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과서 수정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쟁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작자/발행사가 교과서 수정에 적극적이지 않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에 일단 합격하여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의 수정에 저작자 및 출판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에는 교과서 수정, 보완을 위한 상근 직원이 없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출판사의 경우에도 자체 검토 기능이 취약하다. 출판사들은 외부-학생, 교사, 학원 강사, 학부모, 일반 독자-의 문제 제거나 교과부에서 통보하는 관련 기관 검토 의견서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교과서 수정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요소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검정 교과서 합격 종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과서의 수익성이 감소되고, 교과서 관련 참고서 판매 저조에 따른 재정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과서 수정을 위한 비용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는 인건비 부담이 커서 교과서 상시 수정, 보완을 위한 인원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검정 교과서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단지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음에서 살펴볼 검정 교과서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가 좀더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저작자에 대한 교과서 수정명령 이행을 담보할 법적 조건이 미비하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교과서 저작자들은 출원한 교과서가 일단 검정에 합격하여 활용되게 되면 그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특히, 교과서 수정 사항 중 이념적 갈등이나 내용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에는 교과부의 수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금성 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이 교과서의 경우를 보면, 이미 검정을 통과하여 학교에서 사용 중이지만, 교과서 내용 및 관점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교과서 수정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해당 교과서의 수정 결정을 내렸고, 출판사가 교과서 수정을

하였지만 저자가 불복하여 소송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법적 조건들이 미비하여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수정명령을 이행에도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3) 교과서 자율화가 추진되었지만 교과서 수정에 대한 교과부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정책에 발맞추어 <교과서 선진화> 정책이 수립되었고, 교과서의 자율화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교과서 수정에 대한 교과부의 업무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교과서 자율화 정책에 의해 국정 교과서가 검정화되고, 검정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로 전환되는 등 교과서 편찬에 민간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교과서 자율화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를 통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교과서에 반영됨과 동시에 교과부는 교과서 편찬 업무 부담을 덜고,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온갖 다양한 교과서 문제를 다시금 교과부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교과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 상시 수정체제>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수정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과 결재를 담당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교과서 자율화라는 교과서 편찬 정책의 추진과 단순 오류사항까지를 일일이 교과부의 결재를 받아 수정해야 하는 교과서 수정 정책 간에 불일치와 비일관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교과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과부는 최근 들어 교과서 수정보완 요구를 학기별로 1회 하던 것을 매월 취합하여 승인된 수정 내용을 웹에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알리는 이른바 상시수정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연간 약 6,529건('09년) 정도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정보완

의 주요 내용은 첫째, 띄어쓰기 등 단순오류, 둘째, 내용/표기 오류, 셋째, 법령/통계 등의 보완 등이다. 이러한 수정 체제는 문제되는 내용을 매우 빨리 수정 보완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 첫째, 매년 수천 건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만큼 중요한 내용들인가? 둘째, 수시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믿을 수 없는 오류투성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지는 않겠는가? 셋째, 사소한 실수나 통계나 법령 등을 매년 빠르게 반영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교과서는 하나의 교수학습자료라기 보다는 오류가 전혀 없는 또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는 완전무결한 교수학습자료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는 않을까? 상시수정체제를 통하여 사소한 오류들을 빨리 잡아주는 것이 교육에서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전문가의 언급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교과부의 교과서 정책과 행정에서 잡다한 수천 건의 오류 수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교과부 교과서기획과의 제한된 인력이 수많은 교과서의 수정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하고, 승인하는 현재의 체제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부가 직접 편찬한 도서이기 때문에 수정에도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수많은 검정 교과서의 잡다한 오류들에 대한 뒤치다꺼리를 계속해서 교과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교과서 수정에 대한 기본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4) 교과서 수정이 교과서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오류의 지적과 수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교과서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물론 지속적인 수정은 교과서의 오류를 줄이고, 저자나 출판사에게 교과서 편찬자들에게 엄정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교과서 수정 체제가 어느 정도 교과서 질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적인 수정, 지적에 의한 수정만으로는 교과서의 구

성의 틀을 개선하고, 교과서의 오류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자의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일단 검정을 통과하여,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일지라도 저작자나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수정과 개정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교과서 자체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부분적인 오류만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는 방식 소위 부분적인 수정 보완 형태로는 교과서 질 개선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서 수정의 문제는 단지 수정 체제 개선에 머무를 수 없고, 장기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의 개선까지를 함께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가 된다.

다. 교과서 수정 체제 개선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교과서 수정 보완 체제와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곧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그 주된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교과서 수정 정책의 기본 입장을 재정립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교과서 편찬 제도는 크게 변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교육 자율화의 정착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우리의 교과서 정책 중 수정 정책은 아직 이러한 자율화의 흐름에 걸맞게 변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곧 교과서 편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이-저작자, 출판사 등-자율성을 누리는 만큼 오류 수정 등 교과서 질관리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교과서 저작자나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고, 질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교과서 수정에 대한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집필한 자(저작자, 출판사)가 그 교과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수정·보완을 하도록 한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교과서를 개발한 기관에서 교과서 수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검정 교과서는 교과서를 집필한 저작자와 출판한 출판사가 책임지고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정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집필자와 관계되는 출판사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세워져 있고, 현행의 교과서 수정보완 체제도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틀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를 확인한 것은 현재 이러한 원칙을 구현한 교과서 수정 보완 체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더 철저하게 이러한 원칙에 알맞게 교과서 수정 체제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검정 교과서의 수정 보완 내용을 최종적으로 교과부가 검토하고, 승인하고, 결재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교과서 수정을 실행하지 못하는 검정 교과서를 퇴출시키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자율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제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저작자와 출판사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교과부가 관리하는 범위가 구체적인 오류 수정이 아니라, 저자와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가도록 하는 이행력이 있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수정 보완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의 오류와 쟁점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는 적절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단순 오류 곧, 사실적 오류, 통계의 업데이트, 표현, 표기 문법의 문제 등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과서 저작자와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곧 교과서의 단순 오류수정에 대해서는 점차 교과부의 관여를 최소화해 나가고, 관련되는 단체나 기관 등이 그 역할을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이 주도적으로 검정 교과서의 오류 수정에 대한 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에 출판인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ACCURACY E-line)가 교과서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김만곤 외, 2009).

반면에,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처리 문제는 매우 성격이 다르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같이 역사적 관점이나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논쟁은 단지 출판사들의 자율적인 수정 보완 체제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집단들이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때로 교과서가 집단간 이념 논쟁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최근 교과서 수정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진재관 외, 2010). 진재관은 이러한 교과서의 쟁점 해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

[교과서 쟁점의 해소 방안]

가. 교과서 검정까지: 교과서 내용의 중립성 확보 및 정확성 확보

- 1) 교과서 개발 및 편찬의 준거 자료 정비
- 2) 교과서 검정 기준의 정비
- 3) 교과서 업무의 합리화
- 4) 교과서 검정심의회 위상 강화 및 상설 조직화

나. 교과서 검정 이후: 교과서 쟁점 처리 기구 설치 및 해소 절차 마련

- 1) 교과서 쟁점 처리를 담당할 ‘교과서위원회’(가칭) 설치
- 2) 쟁점 해소를 위한 절차 마련 : 쟁점 해소를 위한 전문가(상설화 된 검정심의회 등)에 검토 및 자문의뢰 → 교과서위원회(가칭)의 쟁점 해소 방안 마련 → 쟁점 종결

5) 진재관(2010), “교과서 쟁점의 원인과 해소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시아 3국(한국, 일본, 대만)의 교과서 내용 관련 쟁점과 해소 방안, 연구자료ORM 2010-53, 교과서 쟁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83-95쪽.

이상에서 제시된 교과서 쟁점 해소 방안의 핵심은 활용 중인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쟁점의 경우에는 그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교과서 저작자나 관계자들이 있으므로 교과부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수정을 명령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가 요청된다. 특히,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심의회나 교과서심의회 등에서도 합의를 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쟁론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전공분야뿐만 아니라 교과서 관련 당사자들-교사, 학부모, 일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여 교과서 수정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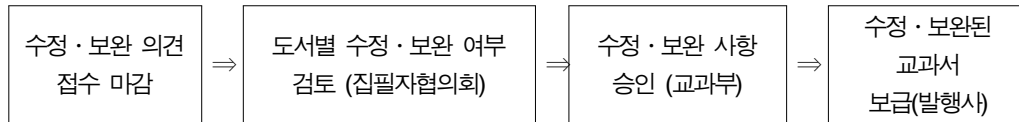
교과서 수정에 관한 현행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수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8.18>

이러한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교과서 수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현재의 규정은 교과서 수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첫째, 법적인 구속력과 강제성이 약해서 수정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수정 관련 사항들이 교과서 정책의 변화에 알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정 도서가 확대되고 인정 도서의 출원이 출판사에게까지 확대되면 인정도서에 대한 수정은 저작자만이 아니라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가 함께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규 개정에는 현안 사항으로 이미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안(2010년 9월 16일 자)을 내놓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V장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3) 교과서 수정이 지속적인 교과서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여 개정판(new edition)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좀더 장기적으로 교과부에서는 교과서 검정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곧 일정한 주기 동안(4년 내외) 사용한 교과서를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하게 하고 이를 검정하는 개정판 교과서 검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교과서 저작자나 출판사들은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여 학교에서 활용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교과서 수정 보완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오류의 수정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수요자들의 요구에 알맞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과서의 질이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 교과부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를 운용하면서, 교육과정 개정 주기와 교과서 개편주기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1대1로 대응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개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과서 개편의 지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교과부에서 교과서의 사용주기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한 것도 이러한 환경에서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곧 교육과정을 그대로 구현한 교과서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서가 전면 개편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현재와 같은 빠른 변화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라는 구체적인 자료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질 개선이 가능한데,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전면적으로 재집필되어서는 축적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 개편은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하되, 교과서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누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 구체적인 대안이 바로 교과서 정기 검정제라고 생각된다.

2. 교과서 감수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의 질 개선과 오류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과서 감수(supervision) 제도이다. ‘감수’는 교과서 심의, 심사, 검정과도 다른 절차로서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최근 인정도서의 확대와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는 교과서 감수 문제를 살펴본다.

가. 교과서 감수의 의미와 확대 배경

교과서 감수(監修)는 교과서의 합격, 불합격 판정과 직접적인 상관없이 행하는 법적 책임이 약한 행정 지도적 성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감

수'라 함은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현 표기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 인정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관이 검토(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교과서 감수는 국립국어원에서 어문규정 관련 감수를 하거나 통일부 등에서 교과서에 실린 통일정책에 대한 감수,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감수 등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학과 같은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과서, 전국 규모로 활용되는 선택과목까지 인정도서로 확대됨에 따라 인정도서의 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곧 시·도 교육청의 교과서 인정권의 확대 및 저작자와 교사들의 교과서 집필과 활용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확대된 고교 선택과목 인정도서들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교과서 감수제의 활성화였다. 곧 인정도서 감수 제도는 인정 심사의 전문성 강화와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2010년 현재 인정도서 교과별로 전문기관 34개를 감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된 도서에 대해서는 감수를 필수화하고, 국정에서 인정으로 전환된 도서에 대해서는 감수위원 등을 활용하여 감수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정 심사 과정에서의 교과 전문성 등을 높여 질 높은 인정도서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표 III-2> 34 개 인정도서 감수 기관 목록

교과	과목	지정	비고
국어(2)	국어(중2, 고) 지도서	2	국어교육학회 단국대학교
사회(1)	사회(고) 지도서	1	중등사회교과교육연구회
도덕(2)	도덕(중2, 고) 지도서	2	한국윤리교육학회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역사(2)	역사(중), 한국사(고) 지도서	2	한국사학회 동서문명연구소
기술·가정 (6)	농업 생명 과학	1	농업교과교육연구회
	공학 기술	1	대한공업교육학회

교과	과목	지정	비고
	가정 과학	1	경남대학교
	창업과 경영	1	중소기업중앙회
	해양 과학	1	부경대학교
	정보	1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전문교과 (8)	원가 회계	4	한국세무학회 장안대학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세무 회계		
	무역 영어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관리		
	전자 상거래 일반		
	창업 일반		
	멀티미디어 일반		
과학 (9)	과학/물리 I /물리Ⅱ/화학 I /화학Ⅱ/생명과학 I /생명과학Ⅱ/지구과학 I /지구과학Ⅱ	3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체육 (3)	운동과 건강 생활	2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중등체육교육연구회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음악 (2)	음악과 사회	2	공주대학교 중등음악교육연구회
	음악의 이해		
미술 (3)	미술과 삶	2	한국조형교육학회 진주교육대학교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외국어Ⅱ (5)	독일어 Ⅱ	1	서울대학교
	프랑스 어 Ⅱ	1	울산대학교
	스페인 어 Ⅱ	1	한국스페인어문학회
	중국어 Ⅱ	1	중등중국어교과교육연구회
	일본어 Ⅱ	2	경상대 일본문화연구소 한국일본어교육학회
한문Ⅱ(1)	한문 Ⅱ	1	한국한문교육학회
초등영어(2)	5/6 전자저작물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합계		34	

교과서 감수 기관은 인정 심사본에 대하여 일정한 감수기준- 편향된 표현, 학계 성과 반영 정도 및 학설상 쟁점, 교과 내용의 오류, 용어 통일, 최

신 사진이나 자료 등-에 의거하여 감수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은 감수결과를 인정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과서 감수를 인정도서 1차 심사로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정도서의 확대와 함께 교과서 감수가 활성화되어 있고, 교과부에서는 이를 지도·지원하고 있다.

나. 교과서 감수의 현안 문제

교과서 감수가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출판사 관계자들은 전문 학술기관 등을 통해 제대로만 감수가 이루어진다면 감수 제도로 최소한의 교과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만큼 교과서 감수는 현실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서 감수의 현안 문제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이고 충실한 감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문기관이나 학계 등이 감수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수를 하게 되는데, 관건은 이 감수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충실한 감수를 진행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수기관에 충분한 예산 지원과 아울러 책무를 명백히 하여 명실공히 내실 있는 감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서도 제기했듯이 감수기관의 실질적이유무상의 보상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서 감수의 실태를 보면, '감수'에 대한 '감수기관'과 '심사기관'의 역할 기대차가 매우 크다. '감수기관'은 '감수'를 '심사'와 대등한 과정으로 인식하며, '감수'가 교과서로서의 지위 부여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심사기관'은, '감수'란 '심사'를 보완해 주는 과정으로서, 감수기관의 '감수 결과'를 심사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감수'는 '심사'를 보완해 주는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감수기관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역할에 대해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과서 감

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재 편찬이 진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선택 과목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편찬 기간 자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자연히 교과서 감수 기간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정도서에 대한 '감수'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감수기간이 필요한데, 감수기간을 확보하다 보면 이후의 심사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인정도서 '감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행 인정도서 인정 신청 기한(사용학기 시작일 6개월 전, 3개월 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다. 교과서 감수의 활용 방안

앞에서 보았듯이, 교과서 감수는 검정심사나 심의와는 성격이 다른 절차이지만 분명히 교과서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향후에 교과서 감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교과서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1) 교과서 감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한다.

교과서 감수가 확대된 현실에서 교과서 감수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기반 예를 들어, 법제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교과서 관계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제화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먼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감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는 있으나, 감수 교과목은 명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교과부장관은 (이하 중략)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교과용도서의 감수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정도로 법제화하여 교과서 감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인정도서의 인정심사에서 각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인 바, 심사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있어야 혼란을 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감수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검정 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해서는 출판사 혹은 저작자들의 의무사항(혹은 권장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과서 감수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보면, “감수를 굳이 법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교과부의 지침을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 심사본 제출 시 감수 내용을 반영한 수정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교과서 심사 및 심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되므로 감수 관련 법령은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교과서 감수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과서 감수를 실시해야 한다면 법제화하여 안정감 있게 운영한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장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교과부의 지침이나 행정명령으로 융통성 있게 감수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 감수제도를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이 올해가 처음이므로 이를 좀더 지켜보고, 이번에 인정도서 심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와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면 추후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교과서 감수의 법제화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교과서 감수가 실질적이고 책무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과서 감수는 우리의 교과서 편찬 현실에서 교과서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만큼 교과서 감수가 교과서 질 개선에 기여하기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책무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감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과서 감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초기에

는 교과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익성이 큰 인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원자가 심의료 및 감수 수당 등을 부담하도록 한다.

둘째, 교과서 감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개정 주기 등과 맞물려 교과서 집필 기간의 확보가 항상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는데, 감수의 경우에도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가 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인정도서 심사 기간과 감수 기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금전적 보상 외에 감수기관 및 감수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판권 또는 표지 등에 감수기관(자)을 표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 교과서 감수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교 선택과목의 인정도서에 대한 감수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교과서 감수 제도는 인정 도서뿐만 아니라 국정도서나 검정도서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어문규정 등에 따른 교과서 집필 내용의 감수는 국정 교과서나 검정 교과서를 막론하고 실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교과서쟁점 관련해서도 필요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감수를 의뢰하여 교과서 수정 보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교과서가 자율화되고, 출판사의 상업적 지향이 강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교과서의 편향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교과부에서는 교과서 감수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IV. 교과서 선정 관련 사항 검토 및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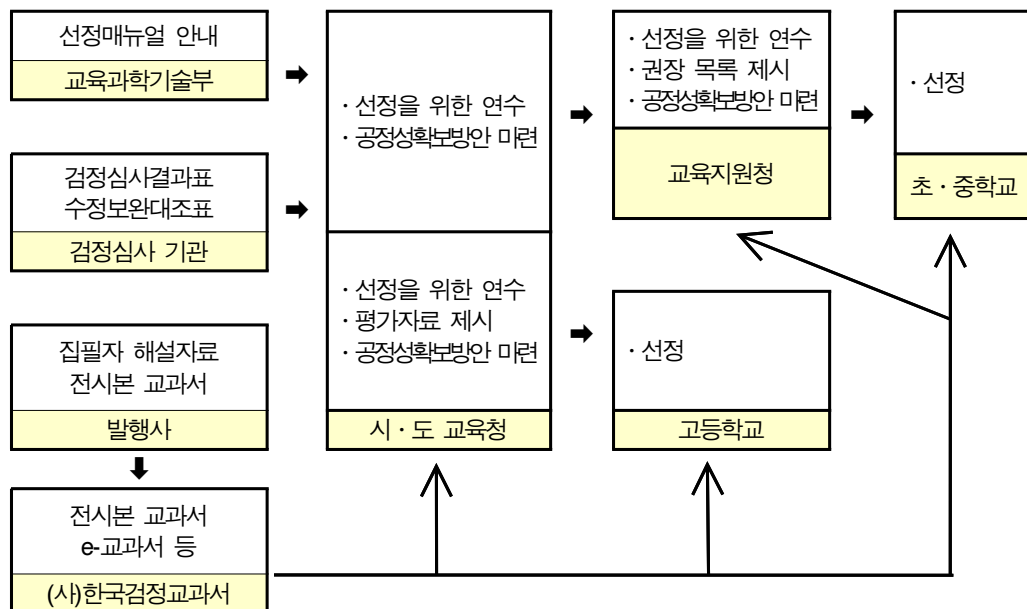
1. 교과서 선정의 의미와 절차
2. 교과서 선정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
3. 교과서 선정 단위 검토
4. 교과서 선정 과정의 감독

1. 교과서 선정의 의미와 절차⁶⁾

가. 교과서 선정의 의미

교과서 선정이란 각 학교가 그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교과협의회 및 학년별 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교과서 선정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수·학습방법과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수준에 적합하고 학습활동에 용이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나. 선정 절차



6) 이 절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서기획과), **검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 2010. 8. 5의 3-7쪽의 내용을 재진술한 것임.

※ 검정심사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 과학 제외 전과목),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 과학)

다. 교과서 선정 시 제공되는 자료

교과서 선정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본 교과서 및 전시본 교사용지도서

가) 전시본 교과서 및 지도서는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택배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보급한다. (※ 분교는 본교에서 전시하며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는 교과서를 주문한 실적이 있는 학교로 제한함.)

나) 전시본 교과서는 검정에 합격한 도서로 교과서 선정의 주된 자료이다. (음악교과의 경우 음원자료 제공)

2) e-교과서

가) 2011년부터 초·중·고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적용되는 교과서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CD로 된 교과서

나) 교과서의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 담고 있으며, 학습자 편의기능(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을 연계, 인쇄, 찾기 등)을 추가하였다.

다)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검정심사를 거친 내용만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으므로,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만 수록하고 있다. (※ 단, 초·중·고교 영어교과의 경우는 검정심사에 통과한 전자저작물을 e-교과서로 대체, 중·고교 영어교과의 경우 기존 듣기자료를 e-교과서에 포함함.)

라) e-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보급하는 발행사에서 제작하며, 서책형 교과서와 같이 전시되므로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마) e-교과서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어, 영어)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에서 감수하고, 기술표준 감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담당한다.

3) 검정심사 결과표

가) 검정심사기관에서 검정심사를 거치며 생성된 자료로, 검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본을 평가한 자료이다. (※ 최종합격공고 이전에는 ‘교과서’로 표현하지 않고 ‘심사본’이라 명명함.)

나) 검정심사결과표는 교과별 심사영역에 따라 등급을 표시한 자료로, 영역별 등급 수준이 교과서를 선정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습환경과 학생들의 여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다) 검정심사 결과표는 검정심사위탁기관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 홈페이지	(나) http://tba.kice.re.kr
(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수학, 과학)	(라) http://kofac.or.kr

4) 수정 · 보완 대조표

가) 검정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 · 표기 등의 오류를 수정 · 보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물로 교과서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나) 전시본 교과서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수정보완 내용이 반영된 상태이다.

다) 수정 · 보완 대조표는 검정심사기관 및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 홈페이지	(바) http://tba.kice.re.kr
(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수학, 과학)	(아) http://kofac.or.kr
(자)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차) http://www.ktbook.com

5) 집필진 해설서

가) 집필진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로, 교과서 집필방향이나 특징 및 장점, 활용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나)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적 홍보 및 안내 자료로, 발행사별로 동일한 분량의 홍보기회를 제공된다.

다) 전시본 교과서와 함께 책자로 제공되며,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http://www.ktbook.com>)에도 탑재된다.

6) 도서별 평가자료

가) 도서별 평가자료는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제공하는 자료로,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이나 교과교육연구회, 학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교과서를 평가한 자료이다.

나) 평가자료 제공은 단위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을 위한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다)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과 교과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라) 교과별 평가자료는 서술형, 계량형 등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각 고등학교에 제공한다.

7) 권장 목록 제시

가) 권장 목록은 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에 제공하는 자료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원이나 교과교육연구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시된 교과서의 특징을 평가한 후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나) 권장목록 제공은, 단위학교에서 1교과 다책으로 인한 교과서 선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며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다) 권장목록에는 전시본 교과서의 개별 특성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작성 제공하되, 분야별(영역별)로 서열이나 순서를 매기는 것도 가능하다.

라) 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시 권장목록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도서별 평가자료 또는 권장목록을 제공하도록 법제화 추진 중)

2. 교과서 선정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⁷⁾

가. 시·도 교육청의 역할

1)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원 연수계획 수립

가) 목적: ① 교과서의 적기 선정과 보급을 위한 일정 안내, ② 교과서 선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숙지

나) 시기 : 교과서 전시본 전시 이전에 완료

다) 대상 : 교육지원청 초·중등 담당자 및 고등학교 관계자

라) 방법 : 시·도의 사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타 연수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각급학교 관계자가 교과서 절차와 선정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마) 내용: ① 교과서 선정을 위한 절차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역할 안내, ② 교과서 전시에 대한 준비사항 안내, ③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안내

2) 고교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시

가) 목적: 시·도의 특성에 적절한 교과서를 선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의 역할을 증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며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마련

나) 추진내용: ① 평가위원은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교원이나 교과교육연구회, 학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②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과 교과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마련하며 자체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자료 제시

7) 이 절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서기획과), **검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 2010. 8. 5의 8-28쪽의 내용을 재진술한 것임.

- 예)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과의 부합성
 ○지역의 여건에 부합한 내용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적절성
 ○학습내용 조직의 논리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 가능성
 ○지역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적용성
 ※ 기타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 가능

다) 평가방법은 교과별로 평가하되 전시되는 교과서 및 e-교과서, 발행사의 집필자 해설자료, 검정심사 위탁기관의 검정심사 결과자료 및 수정보완 대조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

라) 평가결과 기록방법은 평가기준에 따라 교과서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형이나, 교과서의 등급을 나타내는 계량형 등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성

마) 평가 시기는 전시본이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평가 완료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고등학교에 평가자료 안내

3) 교과서 전시

가) 전시 기간 : 매년 적절한 기간 제시(2010년의 경우에는 8월 30일 ~ 10월 6일)

나) 전시 장소 : 시·도 교육감이 정한 장소

다) 전시 대상 도서 : 검정심사에 합격하고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사용할 도서- ※ 전체 428책(103) : 초등학교 132책(28), 중학교 190책(59), 고등학교 106책(16), ()는 e-교과서

라) 유의사항: 전시 대상기관에서는 전시본이 도착하는 즉시 전시 대상 도서목록에 의하여 누락된 도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사)한국검정교과서에 연락 (물류팀 ☎031)8071-1395~6)한다.

4)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가) 시·도교육청 부조리 방지 대책반 구성: ① 위원장- 부조리 근절 대책 총괄, ② 부위원장- 위원장 보좌, ③ 예방분과 :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근절을 위한 예방 지도, ④ 감사분과-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근절을 위한 조사·감사 실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대책반 재정비 및 활용)

나) 부조리 발생 예방 지도: ①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관련 지침 시달, ② 검정도서 선정 방법 및 추천 요령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수 실시, ③ 검정도서 선정을 위한 업자와 학교간의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및 업자와 교사들 간의 금품수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장의 지도·감독이 강화되도록 조치, ④ 척결 의지가 부족한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지도, ⑤ 담임 장학을 통한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근절 실태 확인·점검, ⑥ 검정도서 선정 시기를 전후하여 집중 지도

다)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교육과정정책과 등, ②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검정도서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라) 부조리 근절을 위한 조사·감사 실시: ① 민원발생 학교 대상 감사 실시, ② 교과서 선정 후 사례적 성격의 금품수수 지속 단속, ③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등, 교과별 연수경비, 회식비, 기타 기념품 수수 등

- 부조리 발생 시 특별조사 및 감사 실시 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 등
관련자 엄중 문책

○ 부조리 발생 여지나 징후가 있을 때 : 특별장학 실시

○ 부조리 발생 학교 : 기관, 학교장에게 조치 및 징계

○ 부조리 관련 교원 : 개인별 비리 및 관련 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

※ 관련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02.03),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247호, 2009.04.2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규칙 제734호, 2009.03.06)

- 검정도서 및 부교재 선정을 위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조리를 야기하는 발행인에 대하여는 사직 당국에 고발 등 강경 대응 조치 강구, 필요시 자체지도점검 계획 수립

나. 교육지원청의 역할

1)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원 연수 추진

가) 목적: ① 교과서의 적기 선정과 보급을 위한 일정 안내, ② 교과서 선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숙지

나) 시기 : 교과서 전시본 전시 이전에 완료

다) 대상 : 초·중학교 교과서 업무 담당자

라) 내용: ① 교과서 선정을 위한 절차 및 학교의 역할 안내, ② 교과서 전시, 심의결정 및 주문에 대한 안내, ③ 불공정 사례 및 선정비리에 대한 예방교육

2) 교과서 선정을 위한 권장목록 마련

가) 목적: ① 지역의 특성에 적절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교육청의 역할을 증대하며 책무성 제고

나) 추진내용: ① 권장목록은 교육지원청의 사정에 따라 교원이나 교과교육연구회 등 교과별로 2~5명 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작성, ② 권장목록 작성은 교과별로 전시되는 교과서 및 e-교과서, 발행사의 집필진 해설서, 검정심사 위탁기관의 검정심사결과자료 및 수정보완대조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③ 권장목록은 평가기준에 따라 교과서의 특징에 대한 서술형이나, 교과서의 등급을 나타내는 계량형 등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성, ④ 권장목록은 전시본이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완료하며 권장목록 완료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안내(※ 교육청에서 도서별 평가자료 혹은 권장목록을 제공하도록 법제화 추진 중), ⑤ 권장목록 양식은 교육지원청에

서 자율로 결정하되 단위학교에서 심의하기 좋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공,

다) 교육지원청의 교과서 선정: 학교 수, 교원 배치 현황 등 사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안 가능

- 이 경우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상호 협의 필요(※ 권장목록 제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는 교육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권장목록'외의 도서 선택 가능-교육장은 소속 학교장에게 권장목록 외의 도서 선택 시 승인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3) 교과서 전시

가) 전시 기간 : 교과서 전시 기간을 정하여 안내(2010년의 경우에는 8월 30일 ~ 10월 6일)

나) 전시 장소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 장소

다) 전시 대상 도서 : 검정심사에 합격하고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사용할 도서- ※ 전체 428책(103) : 초등학교 132책(28), 중학교 190책(59), 고등학교 106책(16)
*()는 e-교과서

라) 유의사항: 전시 대상기관에서는 전시본이 도착하는 즉시 전시 대상 도서목록에 의하여 누락된 도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사)한국검정교과서에 연락(물류팀 ☎031)8071-1395~6)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가)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① 관련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02호, 2009.02.03),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247호, 2009.04.22), 시·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도교육청 교육 부조리 관련 지침

②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연수 실시

- 대상 : 각급학교장

- 주요 추진내용: ○ 검정도서 선정을 둘러싼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및 업자와 교사들 간의 금품수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장의 지도·감독이 강화되도록 조치, ○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관련 지침 시달, ○ 검정도서 선정 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수

③ 부조리 예방을 위한 장학활동 강화

- 대상 : 각급학교 교원
- 주요 추진 내용: ○ 부조리 척결 의지가 부족한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지도, ○ 담임 장학을 통한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근절 실태 확인·점검, ○ 검정도서 선정 시기를 전후하여 집중 지도

④ 부조리 센터 운영 및 감사 실시

-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 중등교육과, 관리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청렴클릭센터 등)
- 대상 : 민원발생 학교 대상 감사 실시
- 사전조치 내용: ○ 교과서 선정 후 사례적 성격의 금품수수 지속 단속, ○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등, ○ 교과별 연수경비, 회식비, 기타 기념품 수수 등
- 부조리 발생 시 조치 내용: ○ 부조리 발생 여지나 징후가 있을 때 특별장학 실시, ○ 부조리 발생 학교의 경우에는 기관 및 학교장에게 조치 및 징계, ○ 부조리 관련 교원 : 개인별 비리 및 관련 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

다. 학교의 역할

1) 학교의 교과서 선정 및 전시 방법

가)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 ① 학교별 검정도서 선정은 각 교과협의회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필수사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도록 함. ② 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함. ③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및 교과서 관련 규정 등 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 내 교직원 자율연수를 실시하여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역량을 제고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검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대책 관련 자료를 제공함.) ④ 검정도서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별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 추천의견서, 심의의견서, 회의록 등 제반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교과서 선정 기준표, 선정 절차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 ⑤ 검정도서 선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교직원 간 및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간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함. ⑥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는 교과서 선정과 동일한 단계별(추천, 심의, 확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나) 교과서 전시

① 전시기간 : 교과서 전시 기간을 정하여 안내(2010년의 경우에는 8월 30일 ~ 10월 6일) ※ 전시본 도착일로 부터 전시

② 전시 장소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함.

③ 전시대상 도서 : 검정심사에 합격하고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사용할 도서

※ 전체 428책(103) : 초등학교 132책(28), 중학교 190책(59), 고등학교 106책(16), ()는 e-교과서

④ 전시본 확인: 전시 대상기관에서는 전시본이 도착하는 즉시 전시 대상 도서목록에 의하여 누락된 도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사)한국검정교과서에 연락 후 조치(물류팀 ☎031)8071-1395~6)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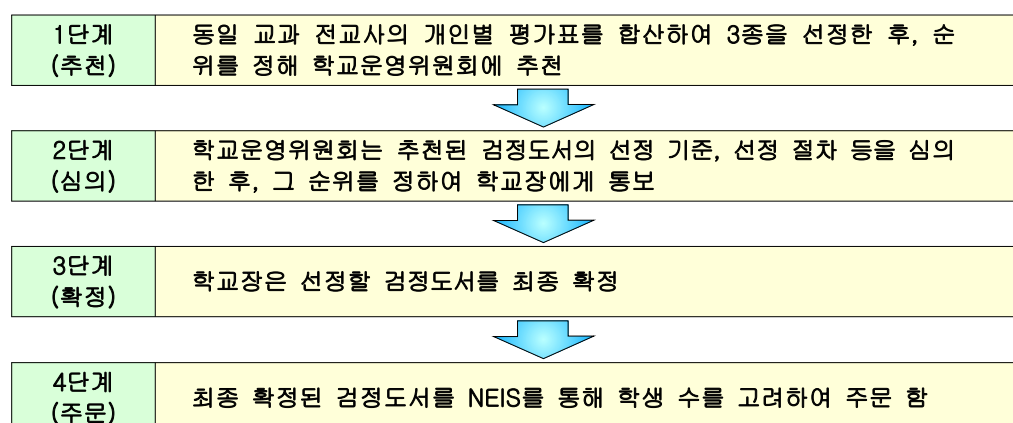
⑤ 유의사항: ○ 전시 장소는 해당 교직원들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학교장이 지정하고 관계자(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고지함. ○ 전시기간 중 출판사 관계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판매업자(서적상)의 학교 출입을 일체 통제함. ○ 전시본은 도서의 선정이 끝난 후 학교별로 자료실 등에 보관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도서를 전시할 때에는 검정 승인을

받은 모든 교과서를 빠짐없이 전시하고, (사)한국검정교과서에서 전시용 도서와 함께 배부된 검정교과서, 집필진 해설서, 검정심사결과표, 수정보완대조표 외의 자료는 전시를 금지함. (※ 해당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출판사가 주최하는 도서설명회 등을 금지), ○ 일부 교과별 교사 모임 등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 분석표 등을 인터넷 상에 올려 특정 검정도서를 간접 홍보함으로써 검정도서 선정의 공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처리 됨.

2)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절차

- 초·중학교
 - 검정도서 선정을 위해 전시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e-교과서, 검정심사결과표, 수정·보완 대조표, 집필진 해설서, 교과별 평가자료, 권장목록을 참고하여 검정도서 선정 계획 수립
- 고등학교
 - 검정도서 선정을 위해 전시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e-교과서, 검정심사결과표, 수정·보완 대조표, 집필자 해설자료, 교과별 평가자료를 참고하여 검정도서 선정 계획 수립

가) 추진개요



나) 세부내용

① 1단계 : 교과협의회의 추천

- 검정도서의 선정 기준표 작성(서식1): ○ 학생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동일 교과 및 학년 교사 수 등), ○ 교과서 선정 기준 항목(참고5)과 검정기준(공통기준 및 교과기준) 및 검정심사 결과표를 고려하여 선정 기준 평가표 작성, ○ 교과서 선정 기준은 검정기준과 달리 교과서 활용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이미 일정 수준을 만족하는 교과서임을 전제할 때, 교사들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서 평가기준 항목으로부터 각급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항목을 추출하여 학교단위의 선정 기준표를 새롭게 작성하도록 함. ○ 교과서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표는 기존에 시교육청 등에서 제공되던 것보다 좀 더 단순화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음. (※ 선정 매뉴얼에서는 표준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표-3>의 평가 기준 항목(예시)을 참고(추가 항목 삽입 및 삭제 가능)하여, 학교에서 직접 조합하여 작성)
- 선정 기준 항목별 점수 및 평가 방법 결정: ○ 교과·학년별 협의회를 통해 선정기준 항목별 점수 결정, ○ 교과서 심사 방법(단원별 심사, 평가기준별 심사 등) 결정

<교과서 선정기준표 작성 예시>

평가 영역	출판사 평가내용	항목별 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학습 분량의 적절성	◦ 학습 분량이 단원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교수 학습 활동의 유용성	◦ 학습 주제에 적절하며, 실현 가능한 학습 활동 및 방법을	20																

평가 영역	출판사 평가내용	항목별 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제시하고 있는가?																	
	⋮																	
	⋮																	
	⋮																	
	합 계	100																
	순 위																	
<div style="text-align: center;"> <종합의견 및 추천의견> </div>																		

- 작성한 선정 기준 평가표를 바탕으로 교과서 심사: 교과 담당 교사 또는 학년 담당 교사들이 작성한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수준,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 교과서를 심사
- 교과별 협의회 검토 후 '추천 검정도서 및 추천의견서(서식 3)'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담당 부서에서는 교과별 추천의견서를 수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함. 개인별 검정도서 선정기준 평가표, 평가 일람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봉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보관함.
-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당해 교과목 자격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을 권장함.

② 2단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추천된 검정도서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의 타당성 등을 심의
-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대표 교사의 설명을 청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추천 검정도서 3종에 대한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에게 추천도서 심의의견서(서식 4)를 제출 (※ 심의의견서에 발행사 운영난 등으로 재 주문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개

최하지 않고 차 순위 도서로 자동 확정할 수 있다는 사항 명기)

- 기타 심의 관계서류는 봉하여 담당부서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보관
- 교과서 선정관련 이해관계자(저작자, 발행사, 대리점 관계자 등)는 학교 운영위원이라도 교과서 선정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 다양한 교과서 심사 방법(예시)

< 설정 >

- ○○ 중학교
- ○○과목 교사 가, 나, 다
- ○○중학교에서 작성한 교과서 선정기준 항목 (a~f) 6가지
- 교과서 분량 총 9단원

○ 교사별 전체 교과서 심사

- 각 교사가 전체 교과서를 모든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 장점 : 동일과목 교사가 모든 교과서를 세부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
- 단점 : 시간이 많이 소요됨.

	단원 1~9
선정기준 a~f	교사 “가”, “나”, “다” 심사

○ 단원별 분담 심사

- 책별로 동일한 단원을 비표 평가하여 각 교과서의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함.
- 장점 : 시간이 짧게 걸리며, 내용의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기 용이함.
- 단점 : 교과서의 전체 구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단원 1~3	단원 4~6	단원 7~9
선정기준 a~f	교사 “가”	교사 “나”	교사 “다”

○ 선정 기준별 분담 심사

- 작성한 선정 기준을 교사별로 나누어 각각의 선정기준으로 교과서 평가
- 장점 : 시간이 짧게 걸리며, 세부 영역에 대한 비교 평가 가능
- 단점 : 선정기준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움

	단원 1~9
선정기준 ㉠, ㉡	교사 “가”
선정기준 ㉢, ㉣	교사 “나”
선정기준 ㉤, ㉥	교사 “다”

③ 3단계 : 확정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선정
-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국·공·사립 동일)

④ 4단계 : 주문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

- 학교의 교과서업무 담당자는 NEIS를 통하여 차년도 사용예정 교과서의 물량을 파악 후 주문
-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
 - 공개 항목 : 교과서 선정 기준표, 절차, 결과, 학부모·학생 의견개진 방법 등
 - 공개 시기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외부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을 최종 선정 전 공개하고 선정 절차 및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후 공개함.
 - 선정 절차는 검정교과서 선정 부조리 방지 대책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결정한 절차를 공개: 교과별 선정 협의회 일시, 참석자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 일시, 참석자 수, 심의 결과, 학교장 최종 선정 결과 단, 선정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 교과서에 한함. 선정 결과 공개 시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의 개인별 평가 결과 및 평가 의견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3. 교과서 선정 단위 검토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정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자율성 확대는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이 커짐을 의미한다. 즉, 교과서 선정을 위해 다양한 교과서를 검토하여 선정해야 하는 교사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 선정은 학교별로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실을 들여다보면, 일선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채택을 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즉,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특정한 교과목의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교사가 각 학교마다 1~2명씩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과목별로 교사 1~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정을 통과한 많은 교과서를 검토하여 그 중 한 교과서만을 선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자신의 판단보다 외부의 의견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발행사에서 제공하는 홍보자료나 직·간접적 지원에 좌우되기 쉽다. 또한 어느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의 선정 권한이 1~2명의 교사에게 집중될 경우 발행사들의 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도 커진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그 규모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대도시에서 집중되면서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학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과서 선정 단위로서의 적절한 규모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1, 2, 3학년 전체를 합하여 10학급 이하로 정하고, 중규모 학교를 11~20학급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21학급 이상은 대규모 학교로 분류하여 실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가. 중학교 교사 현황

2009년 전국의 중학교 학급 수별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볼 때, 1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는 전체 3,106학교 중에서 1,032학교로 33%나 된다. 10~20학급 규모의 학교 수는 560학교로 18%이고, 21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1,514학교로 49%에 불과하다.

<표 IV-1> 2009년 중학교 - 학급수별 학교 수

구분	계	10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총계(%)	3,106(100)	1,032(33.2)	560(18.0)	1,514(48.8)
서울	374	5	62	307
부산	172	11	43	118
대구	123	7	36	80
인천	126	19	15	92
광주	84	9	12	63
대전	86	4	33	49
울산	61	7	8	46
경기	557	100	113	344
강원	164	101	25	38
충북	131	62	17	52
충남	192	114	30	48
전북	204	122	29	53
전남	247	170	27	50
경북	278	170	45	63
경남	265	118	50	97
제주	42	13	15	14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비록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사의 분포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몇 개 주요 과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과목을 담당할 교사는 과목별로 1~2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채택하는데 1~2명만의 검토를 거쳐 선정·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표 IV-2>는 중학교 학급 규모에 따른 과목별 교사 수를 보여주고 있다. 학급 수에 따른 각 과목별 교사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학교 규모가 32학급, 21학급, 18학급, 9학급으로 차이가 있는 학교들을 임의 표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IV-2> 중학교 학급 규모에 따른 과목별 교사 수

과목	32학급 ⁸⁾	21학급 ⁹⁾	18학급 ¹⁰⁾	9학급 ¹¹⁾
도덕	3	2	2	1
국어	7	4	4	2
한문	1	1	1	
수학	6	5	4	2
사회	6	3	3	2
과학	6	4	4	2
체육	5	4	2	1
음악	2	1	1	1
미술	3	2	1	1
영어	6	5	4	2
일본어	1			
가정	2	3(기술·가정)	3(기술·가정)	1(기술·가정)
기술	3			
컴퓨터	1	1		1
보건	1	1	1	
특수	2	2	2	
상담		1		
기타		사서1	급식1	교목1
계	55	40	33	17

8)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중학교로 학급수는 1학년은 10학급이고 2학년과 3학년은 11학급으로 모두 32학급이다.

9)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중학교로 학급수는 학년별 7학급으로 모두 21학급이다.

10)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중학교로 학급수는 1학년 5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6학급으로 모두 18학급이다.

11)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중학교로 학급수는 학년별 3학급으로 모두 9학급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2학급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체육, 기술, 도덕, 미술 등 상당수의 과목에서 과목당 담당 교사가 3인 이상이였다. 이 경우에는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어느 정도 협의와 토론이 가능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1학급과 18학급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기술·가정으로 축소되고 9학급인 경우는 전 과목이 1~2인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교사가 1인밖에 없는 과목도 6개나 되었다.

나. 고등학교 교사 현황

2009년 전국의 고등학교 학급 수별 학교 수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볼 때, 1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는 전체 2,225학교 중에서 345학교로 16%이었다. 10~20학급 규모의 학교는 421학교로 19%이고, 21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1,452학교로 65%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에는 선택 과목이 많고,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라고 하더라도 과목별 교사 구성을 살펴보면 3인 이상의 교사를 두고 있는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영어에 불과하였다.

<표 IV-3> 2009년 고등학교 - 학급 수별 학교 수

구분	계	10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총계(%)	2,225(100)	345(15.5)	421(18.9)	1459(65.6)
서울	308	7	30	271
부산	142	8	13	121
대구	91	6	7	78
인천	111	13	10	88
광주	65	7	1	57
대전	61	2	4	55
울산	49	2	6	41
경기	397	34	61	302

구분	계	10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강원	114	46	26	42
충북	82	13	24	45
충남	117	16	44	57
전북	130	33	32	65
전남	154	55	47	52
경북	193	63	65	65
경남	181	38	44	99
제주	30	2	7	21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다음 <표 IV-4>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30학급, 18학급, 12학급, 6학급으로 규모를 달리하는 학교를 임의로 표집하여 각 과목별 교사 수를 조사하였다.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표 IV-4> 일반계 고등학교 과목별 교사 수

과목	30학급 ¹²⁾	18학급 ¹³⁾	12학급 ¹⁴⁾	6학급 ¹⁵⁾
도덕	2	1	1	
국어	9	6	4	2
한문	1	1	1	
수학	11	5	4	2
사회	9	5	3	2
과학	8	5	4	1
체육	3	2	1	1
음악	1	1	1	
미술	1			
영어	10	5	4	2
중국어	1	1		
일본어	1	1	1	
가정	1	1	1	
기술	1			
컴퓨터	1	1		1
보건	1	1		
기타		특수1,사서1	사서1,특수1	상업2
계	63	40	27	13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0학급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학교의 경우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과목 외에 체육을 포함하여 6개 과목에서 담당 교사가 3인을 넘었다. 그리고 10개 과목이 1~2인의 교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만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과목이 모두 1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8학급과 12학급에서도 동일하지만 체육이 제외되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만이 3인 이상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6학급인 경우는 전 과목이 1인, 혹은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과목은 해당 학교에 과목을 담당할 담당 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순회 교사나 인근 중학교 교사의 고등학교 수업 담당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은 중·고등학교의 교과목별 교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에 학교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은 쉽게 짐작이 간다. 곧 1-2명의 교사들이 10여종 혹은 많은 경우에는 20여종이 넘는 교과서를 모두 훑어보고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업무 부담일 뿐만 아니라, 개인 교사의 선호 등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좌우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교과서 자율화, 교원의 자율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은 교사 중심의 학교별 교과서 선정 제도를 유지하되, 소규모 학교, 과소 교사의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관내 학교들이 공동으로 교과서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교과서 선정을 학교에서 한다는 제도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 12) 부산시 동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급수는 학년별 10학급으로 모두 30학급이다.
 - 13)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급수는 학년별 6학급으로 모두 18학급이다.
 - 14)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급수는 학년별 4학급으로 모두 12학급이다.
 - 15) 전라북도 익산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급수는 학년별 2학급으로 모두 6학급이다.

4. 교과서 선정 과정의 감독

교과서 선정은 발행사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발행사의 입장에서선 일선 학교에서 해당 발행사의 교과서를 선정해주기를 원한다. 따라서 발행사의 입장에서선 교과서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교과서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가 이러한 로비 활동에 좌우될 경우 각 발행사들은 교과서의 질 향상보다는 로비 활동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곧 발행사 간의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교과서 선정과 채택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정행위는 다양하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밝혀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벌을 가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따라야 한다. 즉,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널리 주지시킴으로써 부정행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의 유형

교과서 선정 부정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과서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 행위의 당사자는 발행사 등이나 학교 및 교사 등 모두 해당된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강화하고, 발행사 등에게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알려 이를 사전에 막도록 하고, 교사에게는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연수를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은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의 방지 활동 및 감시 등의 교과서 선정 관련 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발행사·저작자·도서판매업자(이후 ‘발행사 등’이라고 함)가 직·간접적으로 금품·물품·향응·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제의하거나, 학교나 교원이 이를 요청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또는 교구·교재 제공, 교직원 연수 시 차량 등 편의 제공, 각종 공식·비공식 행사 협찬 등

(2) 발행사 등이 개별 홍보자료(리플렛, 브로셔 등) 또는 교사용지도서 및 보조자료(CD) 등을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제의하거나, 학교나 교원이 이를 요청하는 행위

(3) 발행사 등이 참고서 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제의하거나, 학교나 교원이 이를 요청하는 행위

(4) 발행사 등이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교과서 선정을 방해하거나, 홍보자료 또는 언론 등을 통해 다른 교과서를 비방하는 행위

(5) 발행사 등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과서 선정·주문 완료 전 해당 교과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는 행위

(6) 발행사 등이 학연·지연 등을 통해 자사 교과서 선정을 권유하는 행위

(7) 교과서 선정·주문 완료 전 언론 등을 통하여 해당 교과서 발행사, 저작자, 내용 등을 홍보하는 행위

나.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의 처리 절차

교과서 선정은 발행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발행사 등과 교과서 선정에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나 교사 사이에 부정행위가 일어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를 한 교원과 발행사 등을 구별하여 정해야 한다.

- (1)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교과서 선정관련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보고 또는 관할 시·도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교과서 선정관련 부정행위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 관할 시·도교육청(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선정비리 교원
 - ① 학교의 장은 선정비리에 연루된 교원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교과서 선정비리 관련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의거 해당 교원을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선정비리에 연루된 교원이 적발되었을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선정비리에 연루된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별첨 1>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 (4) 선정비리 발행사 등
 - ① 발행사 또는 저작자, 공급인 등이 교과서 선정에 유리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발행사의 증거물을 압수하고,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부정행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 피신고인(발행사 또는 저작자, 공급인 등)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 피고인의 부정행위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및 증거물
- 기타 부정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다. 교과서 선정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적 조치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는 교과서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교육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는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결코 묵인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재정 능력이 부실한 경우 발행사도 포함하여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교과서 선정이 그대로 발행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쉽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벌칙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따라서 교과서 선정이 교과서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 다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의 사례와 이에 대한 벌칙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발행사들에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은 검정 합격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징금의 부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교과서 관련 법규인 교과용도서법에 관한 규정에는 행정처분과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벌칙을 엄격하게 부과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교과용도서법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으로 옮겨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과용도서법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처분(<자료 1> 참조)과 과징금 부과(<자료 2> 참조)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3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자료 1>

행정처분기준(안)(초·중등교육법 제3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2종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효력정지 기간이 1년(12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12개월)으로 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합격을 받은 경우	법제37조의4 제1호	합격취소		
2. 검정도서에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이 검정합격을 받을 당시의 저작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법제37조의4 제2호	합격취소		
3. 검정합격 받은 자가 법37조의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제37조의4 제3호	효력정지 6개월	효력정지 12개월	합격취소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5. 검정도서의 내용, 체재, 지질 등이 검정합격 받은 사항과 다른 경우	법 제37조의4 제4호	효력정지 6개월	효력정지 12개월	합격취소
6. 검정합격을 받은 자가 교과용 도서의 선정·발행 또는 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의4 제5호	효력정지 12개월	합격취소	
7. 발행사 또는 저작자, 그의 대리인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의4 제6호	효력정지 6개월	효력정지 12개월	합격취소
8. 발행사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과용도서를 적기에 발행 및 공급을 하지 아니하여 학생 및 교사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준 경우	법 제37조의4 제6호	효력정지 12개월	합격취소	

<자료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안)(초·중등교육법 제37조의 5 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발행정지 12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사에 대한 처분일에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교과용도서의 1년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발행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사에 대한 처분일에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교과용도서의 1년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액이 없거나 1년간 총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 라. 산정한 과징금의 액수가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본다.

V. 교과서 현안 문제 해소와 관련된 법규 개정 방안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과용도서 관련)
- 2.〈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이상으로 2010년 현재 교과서 제도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 교과서 수정, 감수 및 선정-과 관련된 실태, 현안 및 개선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앞의 논의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제도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과 연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향후에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교과용도서예 관련 규정> 개정 방향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법제화 논의는 앞에서 검토한 문제들을 가장 확고하게 정리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규가 갖는 경직성 때문에 자칫 그 동안 추진해 온 교과서 자율화 정책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과용도서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 9월 16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입법예고를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36호). 그 취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그 후 입법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시 공고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 초에 이미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다. 다음은 공고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1. 개정 이유

교과용도서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 법규가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상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하며, 교과용도서 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교육 현장의 신뢰 구축 등을 위하여 검정 합격 및 인정의 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위의 법률 개정의 이유를 보면, 그 동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사항 일부와 교과서와 관련된 신설 조항들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함으로써 교과서 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교과서 행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거나 이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던 교과서 관련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상위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교과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정 교과서를 출원한 출판사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정 명령의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서 관련 사항들을 상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개정의 주요 내용

- 가. 교과용도서 검정, 인정 신청 및 수수료 부과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 37조)
- 1) 검정 수수료의 부과 근거가 법률에 위임없이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2) 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검정 또는 인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나.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7조의 2)
- 1)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3)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 교과용도서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 37조의3)

- 1)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2)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제때 발행·공급해야 함.
- 3) 발행자가 발행·공급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발행자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검정합격 및 인정의 취소 규정 신설(안 제37조의 4)

- 1) 검정합격 취소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2) 교과용도서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등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검정합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3) 검정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4) 국정도서 편찬, 검정도서의 검정, 교육과정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정금 부과 규정 신설(안 37조의 5)

- 1) 검정합격 효력 정지 처분을 대치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금전적 제재 수단이 필요함.
- 2) 검정합격 효력 정지가 학생 및 교사 등 그 사용자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정합격 효력 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상에서 살펴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교과용도서 검정, 인정 신청 및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규정 신설, 교과용도서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검정합격 및 인정의 취소 규정 신설, 과정금 부과 규정 신설 등이다. 곧 기존에는 주로 하위 규정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었던 것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규

정을 제시하려는 것과 일부 규정의 신설이 그것이다.

법률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삭제한다는 것과 함께 교과용도서에 관한 조항 제35조와 제36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의 초·중등 교육법 제29조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조항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 기능을 해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첫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둘째, 교과용도서에 관련된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근거로서 역할을 해 온 셈이다. 그런데 제29조 ①항은 오늘날 우리 학교의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외에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폐지하고, 제35조에 교과용도서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3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정도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2. 검정도서: 국정도서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3. 인정도서: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② 교과용도서의 사용기준과 절차, 가격결정기준,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기존의 초·중등교육법 제29조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4, 5, 6항을 조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교과용도서의 사용 범위와 더불어 교과용도서의 구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 곧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밖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개정의 취지가 뚜렷하지 않다. 주로 기존의 문맥을 좀더 분명하게 다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지정한 자율학교 등에서는 이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법 조항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과부의 자율학교 운영 지침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한다. 따라서 제35조에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 조항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교과서 자율화 정책과도 일관성이 있을 것 같다. 또한, 위에서 구분한 3가지 형태의 교과서 외에 조만간 자유발행 하는 교과목의 교과서도 생겨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그러한 여지를 두고 있지 못하다. 이 조항의 신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이상에서 살펴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하위법규라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거로 제시된 조항들에 의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과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재조정 혹은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총 8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곧 총칙,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교과용도서심의 회 등, 수정 및 개편, 발행, 가격결정, 감독, 그리고 권한의 위임의 8장으로 구성되었고 각 장별로 하위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추진 계획안(2010. 12)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의 추진 배경과 경과

2009년 7월 20일 국무총리실에서 교과부에 '교과서 선정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검정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통보하였다. 기존의 교과서 선정 실태를 보면, 교과서 발행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참고서 또는 학습지 시장 확보를 위해 일선학교의 검정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불법·과당 경쟁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 규정이 없었다. 예를 들어, 2008년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교과서 선정 시 출판사들의 각종 선정 로비에 대한 언론보도(한겨레신문, 연합뉴스)로 교육계의 신뢰가 훼손된 바 있었다.

2009년 8월 2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교과용도서의 검정 합격취소 등 관련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필요적으로 취소 및 발행정지토록 하는 제재 규정으로 개선하고, 교과서 선정 관련 처벌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불법행위 유형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정수수료의 부과 근거가 법률에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률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2010년 11월 8일 위에서 논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의 추진 경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교과부 업무 추진 경과

-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09.12.23)
-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09.12)**
 - 국·검정도서의 인정전환 확대 및 검정절차의 투명화
 - ※ 국정도서 101종 및 검정도서 39종 등 140종을 인정도서로 전환
 -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
 - ※ 검정도서 선정 매뉴얼 개발·보급, 교과서 선정 관련 평가자료 또는 권장목록 제공토록 하여 시·도교육청 책무성 강화
-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10.1.13)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 계획 수립('10.1.14)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행사 의견조회('10.1.20)
-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협의회('10.2.4)
- 교과용도서 제도개선안(법령개정안) 설명회('10.3.25~26)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정**
 - ※ 법규 개정을 위한 협의회('10.1.13~24) → 입법예고('10.1.20) → 법률안 설명회('10.3.26) → 규제심사('10.5.20) → 법제처심사('10.6~10.25) → 재입법예고('10.9.16) → 차관회의 심의('10.10.28) → 국무회의 심의('10.11.2) → **국회제출('10.11.8)**
- 교과서 선진화 실무 T/F 회의('10.8.10, 11.24)
 -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 및 감수기관 법제화 등
- 규정 개정안 검토를 위한 실무 회의('10.11.10, 11.19)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안 검토

나.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

2010년 12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추진 경과에 따라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부록에 제시된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교육과학기술부, 2010. 12)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들을 검토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개정안은 그동안 누적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므로 대체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제1조(목적)의 재진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상위법의 관련 근거가 변경되면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의 제1조인 목적을 재진술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절 교과용도서’와 관련하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 등으로 재진술한다. 곧 초·중등교육법 제35조부터 제37조의 5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사용기준과 절차·편찬·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2) 제4조의 1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와 절차)에 대한 조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35조 ②항)과 관련하여 (교과용도서의 사용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국정, 검정, 인정 도서체제를 유지하는 한 교과서 지위구분 자체가 사용을 결정짓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방향과 일관된 교과서 사용의 틀을 마련한다. 곧 ① ‘교과용도서지위구분위원회’ 운영 조항 등을 두어 교과용도서의 지위 구분을 공론화, 제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국정, 검정, 인정 도서 외의 향후에 등장하게 될 자유발행 교과서나 교수학습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조항을 신설한다. 이러한 조항을 두어 <교과서 자

을화 정책>과 일관된 교과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3) 검정도서의 검정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안 제6조)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에 따라 검정도서의 검정실시를 위하여 교과목 관련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정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 밖의 교과 교과용도서 검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 심사를 하도록 한다.

4) 변화된 인정 도서의 환경을 반영하여 관련 항목 신설(안 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

2010년 <교과서 선진화> 정책에 의해 대폭 확대 추진되고 있는 인정도서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인정도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다. ① 인정도서의 집필기간, 감수기간 확보를 위해 인정도서 신청기간을 교과목에 따라 6개월에서 3개월 전까지로 조정하도록 한다. ② 다양한 질 높은 인정도서 편찬의 활성화를 위해 인정도서 신청자를 교육장(학교장) 뿐만 아니라 인정도서 저작자와 출판사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5) 안 제14조의 1 인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검정 수수료 조항의 구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37조) ②항에서 “검정 또는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검정수수료)를 (검정 및 인정 수수료)로 개정하여 인정수수료 징수의 근거 조항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또한, 제13조 ③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검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에 의해 인정도서의 인정을

위탁한 기관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이 인정도서의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상당기간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법규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6) (교과용도서의 선정)교과서 선정 방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앞 장에서 논의했던 광역채택제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한다. ① 소규모 학교나 교과목 교사의 수가 과소한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교과서 선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광역채택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고, ②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 등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7)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조직 및 기능 세부규정 마련(안 제18조~제24조)

2009년 현재 교과용도서 심의회는 편찬심의회(27개, 627명), 검정심의회(29개, 465명), 발행심의회(1개, 12명), 운영위원회(1개, 12명)가 운영되었는데, 이를 새롭게 요구되는 심의회 등을 포함하여 확대·개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곧 교과용도서심의회는 편찬심의회·검정심의회·수정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심의회, 운영위원회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한다. 편찬심의회는 국정도서 편찬에 관한 사항, 검정심의회는 검정도서 심의 사항, 수정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사항, 가격결정 및 발행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 및 발행·공급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및 기타사항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8) 안 제22조 (수정심의회) 조항의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37조의 2를 반영하여 교과서 수정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① 교과용도서의 오타자, 명백한 사실오류 등 단순하고 경미한 오류의 경우에는 교과용도서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수정하도록 한다. 다만, 오류 수정이 현저하게 미진하여 해당 교과용도서 학습자에게 크게 지장을 주는 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발행을 중지 또는 보류시킬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 발행되어 사용 중인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쟁이 일어날 경우에 교과용도서 내용 수정과 관련된 교육과정도서심의회(수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을 결정할 수 있다.

9) 심의회 위원의 임면사항 신설(안 제26조, 제27조)

심의회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없으며,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검정심사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검정위원 결격사유를 법령화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10) 검정심의회 위원의 명단 공개(안 제28조)

검정심의회 위원의 명단을 최종 합격결정 발표 후 공개하도록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검정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한다.

11) 교과용도서 수정의 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35조)

현행 규정에는 '교과용도서 수정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교과서 수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소송, 언론보도, 국감지적 등)되기도 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과용도서 수정에 대한 안정적인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이나, 교과용도서 내

용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등으로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검정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들이 상시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 검정신청자가 해당 검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마련한다. 검정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도록 한다.

12) 교과용도서의 '감수' 규정 신설(개정안 제1조, 제37조)

교과용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내용의 중립성 및 용어의 사실적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의 편찬 과정에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여 감수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용도서의 오류 방지 등을 위해 그 동안에도 감수가 이루어져 왔으며, 2010년도의 교과용도서 감수 추진 실적을 보면, 초등학교 국정도서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감수하고, 초·중등학교 역사 교과용도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감수하고, 고등학교 인정도서 46종에 대해서는 34기관을 지정하여 교과용도서 감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동안 교과서 내용 오류 및 편향성과 관련하여 언론, 학계, 국회, 경제단체 등의 지속적인 지적 및 수정 요구에 대해 감수 근거 규정 미비로 교과서 감수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따라서 감수 업무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표현표기가 어문 교정에 어긋난다는 문제, 역사 교과서 내용의 이념편향성 문제, 교과서 내용의 오류 등을 교과서 발행 이전에 바로잡기 위해 교과용도서 감수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신설한다. ① 국정도서는 개발단계에서, 검정도서는 검정단계에서, 인정도서는 인정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기관의 감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 감수기관의 지정과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3) 교과용도서의 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

현행 교과용도서 공급 체제를 살펴보면, 국정도서는 6개 발행사(지역공급소 121개)가 개별 공급하고, 검정도서는 검정교과서(협회, 지역공급소 113개)가 공급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에서 관련 업체 등의 도산이나 문제 발생 등 교과용도서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각급학교에 교과용도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정부(교과부)가 교과용도서의 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14) 검정합격 취소 또는 효력정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44조)

발행자 또는 저작자, 그의 대리인이 학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과용도서를 제때 공급하지 아니하여 학생 및 교사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준 경우에는 검정합격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발행사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처분한 사례가 없었고, 발행사들의 불법 비리 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 취소 또는 효력정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기타(규정 정비)

기타 이상과 같은 개정에 따라 변화가 되어야 할 현행 규정 내용의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한다.

VI.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1. 요약

교과부에서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정 도서를 검정으로, 국정이나 검정 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 하는 등 교과서 자율화를 크게 확대하였다. 그런데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바로 자율화가 교과서의 질 저하나 이념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과서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민주화, 자율화가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전(經典)으로서의 교과서관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자유롭게 편찬되어야 하지만, 교과서의 오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독특한 교과서관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다양화로 인해 나타나는 이념적 갈등이 교과서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와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서 제도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라는 구체적인 매체의 개발과 활용은 정책 주체인 교과부와 함께 다양한 저작자들 그리고 교과서 발행을 담당하는 상업적인 출판사들이 관계하는 복잡한 행정 행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율에 따른 교과서 관련 주체들의 책무성을 묻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현재 교과서 정책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교과서 현안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정비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첫째,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를 추진하되 교과서가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통계수치 등 교과서에 수록된 사실적 자료의 업데이트와 내용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체제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과서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

여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이 교과서의 질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안함과 동시에 교과서 출판사들의 자율적인 수정·보완과 질 관리 체제를 실효성 있게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를 추진하되,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와 같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교과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 선결조건으로서 교과서 내용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과목에 따른 차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어, 도덕, 사회 등 우리나라의 이념적 근간을 다루고 있는 교과/과목의 교과서들은 편찬 자율화에서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과서 내용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수정·보완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 교과서 제도 개선에 따른 교과용 도서 현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적, 현실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등의 제도화 방안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현재 교과서와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교과서 수정, 감수, 선정 등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교과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교과서 수정, 감수 및 채택 관련 외국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교과서 채택제도와 교과서 수정 및 검정 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에 교과서의 자율적인 활용을 추구하면서도 질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오류가 많은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인상적이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과 채택제도 그리고 교과서 수정·보완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매우 체계적이고 안정된 교과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다른 기관들에서 교과서나 교수학습 자료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교과서 수정 및 감수 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먼저, 교과서 수정 관련 내용에서는 현행 교과서 수정 체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수정 체제는 기본적으로 교과용도서 지위부여에 따른 상이한 수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정의 시기를 적기에 맞추기 위해 <교과서 상시 수정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의 교과서 수정 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1) 교과서 저작자/발행사가 교과서 수정에 적극적이지 않다. 2) 저작자에 대한 교과서 수정 명령 이행을 담보할 법적 조건이 미비하다. 3) 교과서 자율화가 추진되었지만 교과서 수정에 대한 교과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4) 교과서 수정이 교과서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행의 교과서 수정 체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교과서 수정 정책의 기본 입장을 재정립한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저작자의 수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과서의 단순 오류와 사회적 쟁점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2)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여 교과서 수정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시킨다. 3) 교과서 수정이 지속적인 교과서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여 개정판(new edition) 검정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교과서 감수 제도에 관해 논의하였다. 교과서 감수란 교과서의 편찬, 검정, 인정의 과정에서 내용의 오류, 어문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전문기관에서 교과서를 검토·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교과서 감수는 교과서의 합격/불합격 판정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이 행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인정도서가 확대되면서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감수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교과서 감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감수 기간이 충분한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서 감수를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1) 교과서 감수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2) 교과서 감수가 실질적이고 책무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가야 하며, 3) 교과서 감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장에서는 교과서 선정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에서 작성 보급한 <검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토대로 교과서 선정의 의미, 절차, 제공되는 자료 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교과서 선정을 위해 각급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곧 교과서 선정을 위한 연수, 교과서 선정 평가자료 제시, 권장목록 작성, 교과서 전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수준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의 학교별 교과서 선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채택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소규모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선정 단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교들이 1-2명의 교사가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개입하여 교과서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과서 선정 과정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 유형을 살펴보았고,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의 처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

고 교과서 선정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적 조치들을 예시하였다.

V 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교과서 현안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교과서 관련 법규 개정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교과부에서 이미 공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과용도서 관련)을 살펴보았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교과부가 2010년 초반부터 구상하여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제안한 것으로 교과서 관련 현안들에 대한 행정 처리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를 두고자 마련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교과용도서 검정, 인정 신청 및 수수료 부과에 근거 규정 신설,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규정 신설, 교과용도서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검정합격 및 인정의 취소 규정 신설,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이다. 곧 기존에는 주로 하위 규정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었던 것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제시하려는 것과 일부 규정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대체로 필요한 조치이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사용 조항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어서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기초와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검토를 요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하위 법규라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거로 제시된 조항들에 의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과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재조정 혹은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총 8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추진 계획안(2010. 12)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감수 규정의 신설, 교과용도서

심의회 조직 및 기능 조정에 관한 규정, 검정심의회 위원 명단 공개, 교과서 수정의 범위 및 절차 마련, 교과용도서의 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 및 검정합격 또는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제언

본 연구는 교과서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0년 현재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교과서 관련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가 수행된 시점이 이미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마련된 시기여서 그 제안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의 통과 이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후에 검토했으면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법률안의 각 조항과 규정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과 우리 교과서 정책에서의 효과 등에 대해 좀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 지위 구분 체제와 사용 절차 등은 학교의 교과서 활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므로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인정도서의 확대와 더불어 제도화, 법제화가 구체화된 ‘교과서 감수’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루어진 감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좀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정책 변화가 큰 고등학교 인정도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정도서 확대와 관련하여 인정도서의 수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법률안과 규정 개정안은 주로 교과서 자율화에 따른 교과서 관련 주체들의 책무성을 확인하거나 행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강제할 조치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교과서 자율화 정책을 소

극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완하는 법제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과서 자율화 확대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에서의 제도화 연구와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검토라든가 교과서 정기검정제 도입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를 위한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9). 교육통계연보.
- 교육과학기술부(2010). 검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36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 김만곤 외(2006). 검정도서 수정·보안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김만곤(2009).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망. 교과서연구, 제57호. pp4-9.
- 김진경(2004). 교과서 편제·집필·검정인 채택에 관한 연구. 서울: 정책기획위원회.
- 김재춘(2010). 우리나라 교과서 인정 제도 개선 과제. 교과서연구, 제60호. pp22-26.
- 김정호(2009). 교과서 인정 제도의 발전 과제. 교과서연구. 제57호. pp.19-25.
- 김현숙(2009). 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와 그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35. pp.68-81.
- 권오현(2009).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역사 교과서. 내일을 여는 역사, 35. pp.56-67.
- 문홍근(2010). 인정 도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 교과서연구, 제60호. pp.17-21.
- 박도순 외(2001).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유학영 외(2009). 교과용 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이병욱(2010). 인정 도서로 전환된 전문 교과 도서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서연구, 제60호. pp.11-16.
- 이승구(2006).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에 부쳐. 교과서연구, 제48호. pp.52-59.
- 이인제 외(2007). 일본의 교과서 검정·채택 정책: 교과서 검정 해외 출장 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 외(2010).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집행 시스템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난심(2009). 미래형 교과서 발전 방향.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 진재관 외(2010). 교과서 쟁점의 원인과 해소 방안. 교과서 쟁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ORM 2010-5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함수곤 외(2003). 일본의 교과용도서 편찬체제 및 개발모형 연구.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3-5.

부 록

[부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부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35조부터 제3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에서 마련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2010. 12)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5조부터 제37조의5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사용기준과 절차·편찬·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의 내용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수”라 함은 교과용도서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내용의 중립성 및 용어의 사실적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의 편찬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사용기준)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인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별 내용 및 특징 등에 관한 평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초·중학교의 장에게 검정도서 선정을 위한 권장목록을 교과목별로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용도서의 편찬·개발·공급 등을 고려하여 국정·검정·인정도서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정도서의 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제6조(검정도서)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검정도서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목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본심사에 필요한 대상도서의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검정의 합격결정) ①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②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제13조(검정수수료)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말한다)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12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의 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소속된 각급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인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

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수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둔다.

제19조(심의회 조직)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편찬심의회, 검정심의회, 수정심의회, 가격결정 및 발행심의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제20조(편찬심의회) 편찬심의회는 도서별·교과별·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정도서의 편찬 세부계획서
2. 국정도서의 원고본·수정본 등의 심의본
3. 기타 편찬에 관한 사항

제21조(검정심의회) 검정심의회는 도서별·교과별·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검정신청 도서에 대한 기초조사와 본심사
2. 편찬상 유의점 및 검정기준
3. 불합격 도서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4. 기타 검정심의에 관한 사항

제22조(수정심의회) ① 수정심의회는 교과별·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고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제34조제1항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
2. 검정도서의 내용 수정 신청에 대한 심의
3. 기타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심의회는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신청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수정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가격결정 및 발행심의회) 가격결정 및 발행심의회는 당해연도의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및 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
2. 교과용도서의 가격조정 및 권고
3.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선정 및 공급
4. 기타 가격결정,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른 심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2. 국·검·인정도서 구분에 관한 사항
3. 교과서 선정·채택 등 교과서 제도 개선사항
4. 기타 다른 심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과용도서의 편찬·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없다.

제27조(위원의 해촉·해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심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28조(위원 명단 공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자의 명단을 최종 합격결정 발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장 등)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
만, 검정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심의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2조(연구위원) ① 검정신청 도서의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3조(실무위원)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제3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35조(수정의 범위 및 절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으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교과용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

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어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교육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② 검정신청한 자(저작자 및 발행자)는 해당 검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정 신청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사항 외 오탈자 및 명백한 사실 오류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제37조(감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개발, 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한 결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발행·공급

제38조(발행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주문)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5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제40조(공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급학교에 교과용도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교과용도서의 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장 가격결정

제41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42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3조(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

제44조(검정합격 취소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자 또는 저작자, 그의 대리인이 학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발행자, 그의 대리인이 교과용도서를 제때에 발행·공급하지 아니하여 학생 및 교사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준 경우

② 초·중등교육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합격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세부적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5조(과징금 부과기준) 초·중등교육법 제37조의5의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장 권한의 위임

제4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7조의5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수정 요청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처분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관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심의
 6.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
 7.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6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